

목 차

■ 低成長 陷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韓國 經濟

- 갈등과 대립을 뛰어넘어 성장, 자유, 화합의 경제로

Executive Summary i

□ 전환기적 경제 위기에 봉착한 국내 경제 1

- 사회 시스템의 낙후로 인한 생산성 저하 1
- 성장, 자유, 화합으로 선진 경제 기반 구축 3

□ 지수 경제와 민생 경제의 괴리 - 2006년 국내 경제의 특징과 문제점 5

- 국민총소득의 부진과 생활 물가 상승 6
- 대외 거래의 실익 감소 8
- 금융 시장 불안정 확대 10
- 저성장 함정의 고착화 12

□ 내우외환이 우려되는 경제 여건 변화 - 2007년 대내외 여건 전망 15

- 세계 경기의 동반 둔화(Global Recession) 15
- 교역 여건의 전반적 악화 16
- 중국발 글로벌 인플레이션 확산 우려 18
- 원화 가치 급등락에 의한 환위험 증대 19
- 북핵 위기와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19
- 대선의 정치 경제학 (Political Economy) 20
- < 주요 현안 1 > 2007년 세계 경제의 9대 트렌드 22

□ 저성장의 未脫出이 예상되는 국내 경제 - 2007년 국내 경제 전망	34
○ 내외수 동반 부진과 경기 재침체	34
○ 금융 시장 변동성 증대	36
○ 산업별 경기 명암 교차	39
○ 남북 경협 위축	46
< 주요 현안 2 > 원/엔 환율의 향방	50
< 주요 현안 3 > 한국 자본 시장의 가능성	53
□ 2007년 5대 경제 현안과 과제 - 정부 정책 과제	56
○ 저성장 지속과 가계 부채 위기	56
○ 외환 시장 불안과 경상수지 적자화	58
○ 부동산 버블 붕괴 우려 증대	59
○ 한반도 정세 불안으로 인한 경제 심리 악화	60
○ 대선 포퓰리즘과 정치 경제	61
□ 성장, 자유, 화합의 선진 경제 기반 구축 - 경제 선진화 과제	63
○ 새해 정책 키워드 - 성장, 자유, 화합	6
○ 경제 사회 시스템의 혁신	67
○ 창의적 교육 개혁의 추구	68
○ 인간 가치 존중과 창조적 도전 정신 - 21세기 자본주의 정신	69
□ 기업은 사회 변화적응력 제고를 통한 지속성장 추구 - 5대 경영전략	71
○ 국내외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 증대	71
○ 경영 키워드 : '사회 친화적 성장 기반 구축'	73
○ 5대 경영 전략	75
: 총체적 리스크 관리, 무형 자산 가치 제고, 고객 가치 극대화, 균형적 사업 구조 구축, 사회 지능 (SQ) 내재화	
■ HRI 경제 지표	81

低成長 陷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韓國 經濟

- 갈등과 대립을 뛰어넘어 성장, 자유, 화합의 경제로

□ 지수 경제와 민생 경제의 괴리

국내 경제는 2006년에 생산 활동 측면에서 파악되는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 기준으로 보면 연간 5% 수준의 전년보다 높은 지수상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수출입의 교역 조건을 감안하여 국민들의 실질 구매력을 나타내는 소득 증가면에서 평가되는 국민총소득(GNI, Gross National Income)은 2% 내외의 증가에 머물렀다. 그 결과 지수 경제가 상승세를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실제 생활 수준은 향상되지 않는 '지수 경제와 민생 경제의 괴리' 현상이 심화되었다. 이를 경제 부문별로 보면 크게 네 가지의 특징적인 양상이 나타난 것으로 평가된다. 첫째 거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2006년에 성장률은 2005년에 비해 높아졌으나 국민 총소득이 부진한 가운데, 생활 물가는 상승세를 나타내어 전반적으로 민생 경제의 활력이 크게 저하되었다. 우선 GDP의 약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소비 부문이 저성장의 장기화에 따라 일자리 창출력이 약화되고, 유가 급등으로 교역 조건이 악화되어 실질 소득이 정체되는 한편, 가계 부채는 급증하여 소비 회복세가 크게 둔화하였다. 또한 설비투자도 내수 시장이 부진한 가운데 출자총액제한 제도와 같은 투자 관련 규제가 존속되어 미약한 회복세를 나타냈다. 건설투자는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에 따라 민간 건설 경기가 크게 위축되어 부진세를 이어갔다. 이러한 내수 경기 부진은 취업 시장의 침체로 이어져 청년 실업 문제와 같은 구조적인 고용 문제들의 해소를 어렵게 하였다. 특히 하반기에는 성장률이 낮아지는데도,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여 수입 물가가 급등하고 생활 물가가 불안해지는 현상이 나타나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에 대한 우려마저 확산되기도 했다.

둘째 무역면에서 보면 국내 수출은 2006년에도 높은 증가세를 기록하였으나, 수출 구조가 편중된 가운데 수입 증가세가 높고 서비스 수지 적자가 늘어나 대외 거래의 실익이 크게 감소하였다. 우선 전체 수출 증가율은 증가하였으나 업종별, 지역별 수출 경기의 양극화가 나타났다. 특히 국내 설비투자 부진으로 자본재 수입 증가율은 낮았던 반면,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원자재 수입 비중이 크게 증가하여 전체 수입 증가율은 20% 내외까지 상승하였다. 또한 원화 환율의 하락으로 여행수지와 같은 서비스수지 적자가 확대되어 경상수지 흑자폭은 전년에 비해 크게 축소되었다.

셋째 금융 시장의 불안정성이 확대되었다. 우선 외환 시장에서는 국내 경상수지 흑자폭이 크게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달러화의 약세 기조로 인해 원화 환율이 급락하였다. 주식 시장에서는 국내 간접 펀드 수요의 증가로 연중 주가는 상승세를 유지하였으나,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로 주가의 급등락이 빈번히 나타났다.

넷째 성장과 분배 측면에서 보면 저성장 함정이 고착화되었다. 수출 호황에도 교역 조건이 악화되어 가계와 기업의 구매력이 급감하였으며, 외환위기 이후 10년 동안 투자 규모가 거의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여 성장잠재력이 크게 훼손되었다. 그 결과 한국 경제는 4년 연속 세계 경제성장률을 밑도는 저성장 함정에 빠지게 되었다. 더구나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어 중산층마저 붕괴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특히 국내 경제의 활력이 크게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유가 급등,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와 같은 잦은 대외적인 충격들이 경제의 불확실성마저 증폭시켜 국내 경기의 회복 주기가 크게 단축되는 현상마저 나타났다.

□ 내우외환이 우려되는 경제 여건 변화

한국 경제는 2007년에 내우외환의 경제 여건에 직면하게 되어 경기 침체 양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외적 여건으로는 첫째 세계 경기의 동반 둔화(Global Recession)가 예상된다. 2006년 하반기 이후 미국 경제는 주택 경기 침체에 따르는 소비 부문의 부진으로 성장률이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경기 하강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비록 EU와 일본이 장기 불황에서 탈피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세계 경제 성장을 견인할 여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 경제도 높은 성장률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나, 경기 안정을 위한 중국 정부의 긴축 정책이 보다 강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성장을 둔화는 불가피한 실정이다. 둘째 한국 경제의 교역 여건이 전반적으로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경기 하강으로 개도국 상품에 대한 수요가 하락함에 따라 세계 교역량 증가세가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07년에도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확대되고, 미국 경기가 둔화되는 한편 미국과 일본, 유럽과의 금리 차 축소로 주요 기축 통화들에 대해 미국 달러화가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더해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과 OPEC의 감산 정책 등으로 2006년 하반기부터 하락세를 보이던 국제 유가 역시 다시 반등세를 나타낼 가능성도 높은 실정이다. 특히 세계 경제의 성장세 둔화는 주된 상품 수입국인 선진국과 수출국인 개도국 간의 통상 마찰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셋째 중국발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확산될 우려도 존재한다. 중국 경제의 임금과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여 중국 내 물가 불안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까닭이다. 이는 중국 제품의 수출 단가 상승으로 이어져 미국, 일본 등 주요 수입국 물가를 자극하여 세계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가능성을 높여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대내적 여건으로는 첫째 원화 가치 급등락에 의한 환위험 증대가 우려된다. 2007년 원화 환율은 미 달러화의 글로벌 약세의 영향으로 2006년보다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국내 경기 침체,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Geopolitical Risk) 등으로 급등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어 환율의 급변동 가능성이 존재한다. 둘째 북핵 위기와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에 따르는 경제 심리 위축이 우려된다. 다행히 최근 북한이 6자 회담 재개에 합의하고, 미국 민주당이 중간선거에 승리하여 북한 핵실험으로 촉발되었던 '제재와 위기' 국면은 '대화와 협상'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다. 그러나 핵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북미간 이견차가 손쉽게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한반도의 정세 불안은 2007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대선의 정치 경제학(Political Economy)에 의한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폭될 것으로 판단된다. 2007년에는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기 때문에, 경제 정책 방향은 경제 논리보다는 선거를 의식한 정치 경제 논리에 의해 좌우될 우려가 높다. 만약 경제 정책이 인기영합주의에 편승할 경우, 정책 일관성이 상실되고 정책 혼선이 심화되어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폭될 뿐만 아니라 정책의 유효성이 크게 떨어지게 된다. 특히 무리한 경기 부양책은 재정 부담의 증가로 이어져 조세나 국채 발행을 증가시켜 민간 경제의 활력이 위축되는 '재정의 구축(crowding out)' 효과를 발생시킬 것이다.

□ 저성장의 未탈출이 예상되는 국내 경제

내외환이 예상되는 2007년의 대내외 여건을 고려해 볼 때, 국내 경제는 내수와 외수의 동반 부진으로 경기가 재침체되는 가운데 금융 시장의 변동성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산업별 경기차가 뚜렷할 것으로 보이며 남북 경협은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한국 경제의 2007년 성장률은 내외수 경기의 동반 부진으로 2006년의 5%보다 낮은 4.2%로 전망된다. 부문별로는 민간 소비가 실질 소득이 감소하고 가계 부채가 증가하여 실질 구매력이 저하됨에 따라 증가율이 2006년에 비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설비투자 역시 출자총액제한제도, 수도권 규제와 같은 투자 관련 제도의 개선이 미흡하고, 내외수 경기의 동반 부진과 정치 사회의 불안으로 투자 심리가 악화되어 부진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투자도 기업도시, 혁신도시와 같은 공공 부문의 투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민간 부동산 경기의 악화로 침체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내수 부진의 위축으로 고용 시장은 2007년에도 매우 부진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제조업 취업자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그동안 고용 시장을 받쳐왔던 서비스 산업의 고용 창출력도 약화될 것이다. 한편 내수 부진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상승하고 서비스 요금의 인상이 지속되면 국내 생활 물가의 상승 압력은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더욱 높아질 수 있다. 특히 경상수지는 수출 경기의 둔화, 원유 수입액의 증가, 서비스 수지의 적자폭 확대로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적자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 시장은 실물 경기의 부진보다 개별 시장의 수급 여건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주식 시장은 금리 하락, 적립식 펀드 수요 증가 등의 우호적인 수급 요인들이 존재하여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원화 환율은 글로벌 달러화의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국내 경기의 침체세가 깊어지고,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증대할 경우에 오히려 급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반면 국내 금리는 국내 경기의 부진세와 미국 등 주요국의 금리 인하 정책의 영향으로 2006년에 비해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7년 산업별 경기를 살펴보면 반도체, 조선 산업 등은 호황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산업의 경우 2006년에 국내 업체들을 제외한 세계 주요 업체들이 신생산 공정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지연됨에 따라 생산 차질이 발생하여, 향후 제품 단가 상승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새로운 윈도우 운영 체제인 '비스타'의 출시로 반도체 산업의 전방 산업인 PC 산업의 생산 증가도 예상되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 경기는 2006년의 호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조선 산업에서는 이미 향후 4년여의 수주 물량이 확보되어 있어 호조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자동차, IT, 기계, 물류, 해운 산업은 2006년 수준 정도의 산업 경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동차 생산은 주요 수출 지역 중 하나인

미국 경기가 하강하고, 고유가에 따르는 내수 부진 등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IT 산업은 업종간 양극화가 예상된다. 무선통신기기 부문의 경우 지상파 디엠비(DMB, 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디지털이동멀티미디어방송서비스) 서비스 지역 확대, 와이브로(WiBro, Wireless Broadband Internet, 무선광대역인터넷) 보급과 같은 신규 서비스 시장 확대로 호황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대부분의 IT 업종들은 IT 산업 경기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 경제의 부진으로 미약한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기계 산업은 2006년에 수년 만의 호황을 누렸지만, 2007년에는 세계 경기 둔화, 국내 설비투자 부진 등으로 호조세를 이어가지는 못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해운 산업은 북태평양 항로의 중심축인 중국 경제가 높은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 중국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으나, 대형 선사들간의 시장 경쟁이 심화되어 호황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건설 산업은 공공 부문의 경우 공영 개발 방식의 임대 주택 사업 확대와 BTL(Build Transfer Lease, 민간자본유치사업)이 본격화되는 긍정적 요인이 존재하나, 정부의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의 영향에 따르는 민간 부동산 경기 하강으로 침체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으로 남북 경협은 북핵 문제에 따르는 한반도 정세 불안의 영향으로 예전보다 위축될 전망이다. 물론 북미간 군사적 충돌로 이어지지 않는 한 남북한의 민간 교역과 개성 공단 등의 기존 경협 사업은 꾸준히 성장할 것이다. 다만, 미국이 대북 경협에 대한 투명성 제고와 속도 조절을 요구하고, 국내에서 대북 지원 반대 여론이 확산될 경우에는 남북 경협의 지체와 서행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5대 국내 경제 현안과 대응 전략

국내외 경제 여건의 변화와 전망을 감안할 때 2007년에는 저성장 지속과 가계 부채 위기, 외환 시장 불안과 경상수지 적자화, 부동산 버블 붕괴 우려 증대, 한반도 정세 불안으로 인한 경제 심리 악화, 대선 포퓰리즘과 정치 경제라는 5대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2007년에는 저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에 들어 급증한 가계부채발 경제 위기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560조원으로까지 늘어난 가계부채는 2007년 국내 경제 운영을 매우 어렵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일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금융 긴축 정책을 지속하여 금리가 올라가고 경기 침체로 가계의 실질 소득이 늘지 않는다면 가계 파산이 증가하고 서민 금융 기관을 중심으로 금융권의 경영 부실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경제 위기 가능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제 정책 목표로 국민총생산(GDP)과 함께, 체감 경기와 밀접한 국민총소득(GNI) 증가를 중시해야 한다. 국민총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기 확장적 금리·재정 정책 추진, 기업 투자 활성화, 건설 경기 연착륙 등으로 내수 경기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또한 가계 부채 문

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가계 부채의 모니터링 강화, 기존의 신용 회생 제도의 대상 요건 완화 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으며, 특히 부동산 시장에 집중되어 있는 비생산적인 자금을 주식 시장으로 이동시켜 자금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둘째 외환 시장의 불안이 가중되면서 원화 환율이 급등할 경우 경상수지 적자가 큰 폭으로 확대되어 국내 경제의 성장 활력이 크게 저상(沮喪)될 수 있다. 외환 리스크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외환 시장 관리 능력을 제고시켜 환율 급변동을 막아야 할 것이다. 특히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 급증시 국내외 자본의 급격한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간 외환 유출입 동향 파악'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경상수지 적자 문제가 심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한미 FTA 체결 등을 통해 자유무역지대를 넓혀나감으로써 높아지는 수출 장벽에 대처해야 한다.

2007년에도 부동산 시장은 국내 경제의 정책 운영을 어렵게 하는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예상된다.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한국의 부동산 문제가 미래 노후 대책용 투자 대상이라는 측면과 교육 환경과 같은 사회 문화적 요인 등이 복합되어 나타나는 문제점임을 감안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따라서 부동산 대책은 단기간 내 부동산 가격의 급락을 유도하기보다 지역별, 주택 유형별 수급 여건과 향후 인구 구조 변화 등을 감안하여 보다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북핵 문제가 2007년에도 한국 경제에 부정적 충격을 주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북핵 문제로 인한 경제 심리 악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북미 양측에 대한 위기관리 능력을 제고하고, 주변국은 물론 UN, 미국 등 전통 우방 국가들과의 공조 체제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최근에 들어 북핵 문제를 포함하여 환율 급변동, 유가 상승 등 한국 경제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대외 불확실성들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기존의 경제 위기 조기 경보 시스템, 금융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보강하고, 대내외 경제 위기 관리 시스템의 실효성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다. 다섯째 대선을 의식한 인기영합 정책이 경제 정책의 혼선을 빚어 국내 경기의 정상적 흐름을 방해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정치 논리에 의한 비합리적인 정책 추진을 엄격히 금해야 한다. 먼저 자원 조달을 고려하지 않는 인기영합적 정책을 지양하고, 경제 논리에 입각한 일관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또한 경기 인식, 기업 규제, 조세 정책 등에서 나타나는 당정청간의 정책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무 부서인 재경부의 경제 정책 기능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인기영합주의가 자칫 반(反) 기업 정서로 이어져 기업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가능성을 고려해 볼 때, 정부의 기업 정책의 초점은 기업의 지배구조개선과 같은 경영권 문제에서 벗어나, 투자 관련 제도의 획기적 개혁 등 시장 경제 원리를 확립하는 데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경제 정책을 추진할 시 경제의 한 측면만을 보고 정책을 추진하기보다, 경제 전반에 대한 영향을 고려한 종합적 문제 해결 지향 정책(Total Solution Policy)을 추구해야 한다.

□ 성장, 자유, 화합의 선진 경제 기반 구축

돌이켜 보면 한국 경제가 저성장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21세기 대외 여건의 변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데 근본 원인이 있다. 금세기에 들어 세계는 20세기의 냉전 체제가 해소되며 효율성과 경쟁을 중시하는 자유 시장 원리가 세계의 보편적 이념으로 확산되고 인간의 지적 능력과 창조력이 경쟁의 핵심이 되는 지식 사회가 빠르게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가치관의 혼란, 계층간·세대간의 갈등과 대립 등으로 이러한 외부적 세계 변화에 적응하지 못함에 따라 국가 전반의 정치 경제 사회 시스템이 낙후되고 생산성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한국 경제의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것을 막고, 한국 경제가 선진 경제권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2007년에 무엇보다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신성장 동력 확충(성장), 경제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를 위한 자유 시장 경제 창달(자유), 화합을 통한 국력 결집(화합)에 힘써야 할 것이다. 첫째 신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성장 없이 한 계층에서 다른 계층으로 부(富)를 단순히 이전하는 영화(零和, zero-sum) 방식의 분배 정책에서 탈피하여, 상호 이해와 협력 속에서 사회 전체의 성장 활력을 높여 전체적인 부를 증대시키기 위한 비영화(非零和, non zero-sum) 방식의 '지속 가능 분배를 위한 성장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IT 등 미래 유망 산업 육성,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자본 시장 선진화를 통한 금융 선순환 구조 확립, 수출 대상 지역의 다변화, 주요 교역국과의 FTA 적극 추진 등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 자유 시장 경제 창달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규제 개혁을 추진하고, 작은 정부를 실현해 나가야 한다. 또한 국내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이념간, 계층간 대립에서 벗어나 서로 이해하고 화합하여 경제력을 결집하는 상생의 경제를 창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중·소기업간, 도농간, 협력 문화가 조속히 형성되고 정부의 사회 갈등에 대한 적극적 중재와 조정자의 역할이 증대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성장, 자유, 화합의 정책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힘을 모아서,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화합과 실천의 리더십이 요구된다. 따라서 2007년은 참되고 실속 있는 정책 과제들을 힘써 실천하는 무실역행(務實力行)의 리더십을 확립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해가 될 것이다.

다음으로는 국내 경제의 선진화를 중장기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정치·경제·사회 시스템을 혁신해 나가야 한다. 사회 구성원간의 화합과 신뢰 제고를 위한 법치주의 확립, 선거제도와 정치 문화의 개혁, 글로벌 스탠다드 구축, 자유 시장 경제 확립이 이를 위한 과제이다. 또한 한국 경제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정치·경제·사회의 변화와 함께 21세기 지력(知力) 시대에 적합한 교육 혁신도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 혁신의 방향은 인간의 창의성과 지적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 정책에 대한 획일적 평등주의를 지양하고, 교육(教育)과 훈련(訓練, Discipline)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혁해 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민 역량을 결집하고 정부 정책 목표를 달성하려면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가치관을 새롭게 확립해야 한다. 다시 말해 근면과 절약이 덕목이 되는 자본주의 경제 정신을 이해하고, 새로운 자본주의 철학으로서 자본주의의 기본 기능인 시장 원리와 인간 가치의 존엄성을 소중히 여기는 인본자본주의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인본자본주의가 경제 발전 전략으로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새로운 목표에 도전하여 성취하는 것을 의미하는 '창조적 도전 정신'과 지역간·세대간·계층간 갈등과 장벽을 해소하여 국민 화합과 국력의 결집을 유도하는 '역동적 화합 정신'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 기업은 사회 변화 적응력 제고를 통한 지속 성장 추구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및 글로벌 환경 등 2007년 국내외 경영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북한 핵실험으로 촉발될 수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 다가올 대선 정국 등은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을 더욱 증대시키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기업들은 불확실한 경영 여건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면서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사회 친화적 성장 기반 구축에 경영 전략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를 위한 기본 전략의 방향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질적 성장에 중점을 둔 내실 추구하고 기업가치 제고에 주력해야 한다. 특히 브랜드 파워 및 기업 평판 등 무형자산 관리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둘째, 핵심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인프라 구축에 힘을 쏟아야 한다. 혁신적 인재 육성과 경영 효율화는 물론, 사회지능(SQ: Social Intelligence Quotient) 향상을 통한 사회 대응력 제고를 통해 조직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 셋째, 지속가능경영을 추구해야 한다. 핵심 수익 사업과 신규 고부가가치 사업의 균형적 사업 구조를 구축하는 한편, 다양한 사회적 책임 수행 방안을 마련하는 사회 친화적 기업문화 구축을 통하여 소비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자 모두의 신뢰 증진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기업의 실행 방안은 크게 5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총체적 리스크 관리 및 경영권 안정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사업 위험, 신용 위험 등 경영과 관련된 모든 위험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상시 위험관리 체제로 내부 조직을 정비해야 한다. 글로벌 투기 자본 및 적대적 M&A 세력에 대비하여 기업 가치를 제고시킴으로써 경영권 안정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둘째, 무형자산 가치 제고에 주력해야 한다. 특히 브랜드 가치와 같은 무형 자산의 확대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셋째, 고객 관계 재정립과 사회적 책임의 능동적 수행이 필요하다. 시장 주도적으로 변하고 있는 소비자들의 참여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함께 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동반자로서의 인식이 필요하다. 넷째, 수익성 중심의 사업 재편과 유망 성장 사업에 대한 투자를 선별적으로 추진하여 균형적 사업 구조를 이루어야 한다. 다섯째, 기업과 조직원의 사회지능을 높여 사회 대응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직원들의 사회지능 개발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성과에 대한 효율적 인사시스템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기업 차원에서는 전사적 사회지능 향상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고 조직 전체의 대외 교섭력 및 친화력을 제고하여, 대내외 우호적 여건 조성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조직 전체의 사회지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SQ리더십이 필수적이다. 경영 리더는 구성원들이 긍정적이고 창의적인 사고와 업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감성과 열정을 가지고 조직 전체의 화합을 유도해야 한다.

전환기적 경제 위기에 봉착한 한국 경제

지수 경제와 민생 경제의 괴리

2008년 특징과 문제점	국민총소득의 부진과 생활 물가 상승 • 소비 부진 • 설비투자 미흡 • 건설투자 정체 • 고용 부진 지속 • 생활물가 상승	대외 거래의 실적 감소 • 수출 구조 악화 • 원자재 수입 급증 • 경상수지 흑자 급감	금융 시장 불안정 확대 • 원화 환율 급락 • 주식 시장 조정 장기화 • 장단기 금리차의 축소	저성장 암정의 고착화 • 교역 조건 악화 • 중산층 약화와 소득 양극화 심화 • 성장 잠재력 저하 • 세계와 국내 경기 괴리 • 비즈니스 사이클의 단축
---------------------	--	--	--	--

내수외환이 우려되는 경제 여건 변화

2007년 대내외 여건	대외 여건 • 세계 경기의 동반 둔화 (Global Recession) • 교역 여건의 전반적 악화 • 중국 淸 글로벌 인플레이 확산 우려	대내 여건 • 원화 가치 급등락에 의한 환위험 증대 • 북핵 위기와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 대선의 정치 경제학 (Political Economy)
--------------------	---	--

저성장의未탈출이 예상되는 국내 경제

2007년 전망	내외수 동반 부진과 경기 재침체 • 내수 부진 지속 • 고용 시장 불안 지속 • 물가 상승 압력 증대 • 10년만의 경상수지 적자 반전	금융 시장 변동성 증대 • 주식 시장 불확실성 증가 • 원/달러 환율 급등락 요인 병존 • 경기 침체에 따르는 금리 하락	산업별 경기 명암 교차 • 경기 호황: 반도체, 조선 • 경기 유지: 자동차, IT, 기계, 물류, 예운 • 경기 부진: 건설	남북 경협 위축 • 북핵 사태 중장기화로 남북 경협 저조 우려 • 정부 지원과 민간의 신규 경협 위축 예상
-------------	--	---	--	--

2007년 5대 국내 경제 현안과 과제

정부 정책 과제	저성장 지속과 가계 부채 위기 • 기업 투자 활성화 • 건설 경기 연착륙 • 가계 가처분 소득 위축 방지 • 신용 회복 제도의 실효성 강화 • 자금의 선순환 구조 구축	외환 시장 불안과 경상수지 적자화 • 안정적 외환 관리 방안 수립 • 결제 통화 다변화 유도 • 안미 FTA 추진 명확화	부동산 버블 붕괴 우려 증대 • 지역별 주택 공급 차별화 • 비강남권 주거 환경 개선으로 강남권 수요 분산 • 연평별 인구 구조를 감안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	한반도 정세 불안으로 인한 경상수지 적자화 • 북미 양측에 대한 위기 관리 능력 제고 • 주변국에 대한 다각적 외교 • 전통 우방과의 동맹 체제 정립 • 위기관리 시스템 실효성 제고	대선 포퓰리즘과 정치 경제 • 정책의 합리성과 일관성 유지 • 기업 투자 규제 완화
----------------	---	---	---	--	---

성장, 자유, 화합의 선진 경제 기반 구축

경제 선진화 과제	새내 정책 키워드 : 성장, 자유, 화합 • 신성장 동력 확보 (성장) • 자유 시장 경제 장달 (자유) • 화합을 통한 국력 결집 (화합) • 무실역행의 리더십	경제 사회 시스템의 혁신 • 화합과 신뢰 제고를 위한 법치주의 확립 • 선거 제도와 정치 문화 개선 • 글로벌 스탠다드 확립 • 시장 경제 원리 정착	창의적 교육 개혁의 추구 • 획일적 평등주의 타파 • 경쟁에 기반을 둔 敎育과 訓 (discipline) 시스템 개혁	인간 가치 존중과 창조적 도전 정신 : 21세기 자본주의 정신 • 자본주의에 대한 올바른 이해 • 신인본주의 가치관 확립 • 경제 정신의 정립: 창조적 도전 정신 역동적 화합 정신
-----------------	---	--	--	--

기업은 사회 변화 적응력 제고를 통한 지속 성장 추구

경영 키워드	내실경영을 통한 가치 제고 • 경영 리스크 최소화 • 무형자산의 가치 극대화	핵심역량 및 인프라 구축 • 인재 육성 및 경영 프로세스 체계화 • 환경 변화에 대한 유연성 강화	지속가능경영 추구 • 기존/신규사업의 조화 • 사회 친화적 기업 문화 창조		
	총체적 리스크 관리 • 조기위험 경보 체계 구축 • 경영권 안정화 노력 지속	무형 자산 가치 제고 • 브랜드 가치 제고 • 지적재산권 보호	고객 가치 극대화 • 고객 관계 재정립 • 사회적 책임의 능동적 대응 • 다양한 고객 가치 대응	균형적 사업 구조 구축 • 핵심사업 집중 투자 • 고부가가치 신사업 지속적 탐색	사회 지능 (SQ) 내재화 • 구성원의 SQ 향상 • SQ 리더십 제고 • 대내외 우호 여건 조성

低成長 陷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韓國 經濟

- 갈등과 대립을 뛰어넘어 성장, 자유, 화합의 경제로

□ 전환기적 경제 위기에 봉착한 국내 경제

한국 경제가 좀처럼 성장의 활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2006년 국내 경제는 국내총생산(GDP)이 4%대 후반의 성장률을 기록함에도, 국민총소득(GNI)은 2% 내외의 낮은 증가에 머물러 ‘지수 경제와 민생 경제의 괴리’ 라는 특징을 나타냈다. 또한 한국 경제는 4년 연속 세계 평균을 밑도는 저성장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세계 경제가 5%대 성장이라는 호황을 기록하는 가운데 한국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성장에 그칠 것으로 보이는 까닭이다. 즉, 국민 실질 소득의 정체와 저성장은 소비 부진과 투자 침체로 이어지고 고용 불안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성장 잠재력을 저하시켜 다시금 저성장의 길로 들어서게 한다. 한국 경제가 이른바 빈곤의 악순환(vicious circle of poverty)에 빠져들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 사회 시스템의 낙후로 인한 생산성의 저하

우리 경제가 저성장 함정에 빠져들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21세기 대외 여건 변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지금 세계는 경쟁 원리를 바탕으로 한 세계화 현상과 인간의 지적 능력과 창조력을 중시하는 미래 지

향의 지식 사회가 급속히 전개되고 있다. 20세기의 냉전 체제가 해소되고 디지털 혁명이 전개됨에 따라 효율성과 경쟁을 중시하는 자유 시장 원리가 전 세계의 보편적 경제 이념으로 확산되는가 하면, 인간의 지적 능력과 창조력이 경쟁의 핵심 요소가 되는 지식 사회가 빠르게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도 20세기의 유물인 이념 논쟁에 몰두하고 있고 획일적인 평균주의에 빠져 세계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 더구나 한국 사회는 그간의 압축 성장에 따른 농촌, 산업, 정보 사회가 공존하고 있어 가치관의 혼란, 계층간·세대간의 갈등과 대립 그리고 충돌 현상이 심화되는 부작용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한국 경제는 20세기에서 21세기로 넘어가는 길목에서 새로운 성장을 위한 전환기적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이다.

엘빈 토플러(Alvin Toffler)는 어느 나라, 어느 사회이든 사회 전체의 모든 분야가 외부적 세계 변화에 동시에 적응하지 못하면 ‘시간의 충돌(Crash of Speed)’ 현상이 나타나고, 적응이 지체되는 분야 때문에 전체 국가 발전이 발목을 잡히게 된다고 역설하였다. 다시 말해 한 나라의 성장과 발전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각 부문이 동일한 수준으로 발전하는 동시화(Synchronization)를 이룰 때만 비로소 전체적인 높은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국가 사회의 어느 한 부문이라도 외부 변화에 적응이 지체될 경우에는 나라 전체를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는 국가 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이 어려워져 국가 운영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최근에 들어서 투자와 노동 이외에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국가 시스템의 선진화 정도를 반영하는 총요소생산성(TFP: Total Factor Productivity)이 갈수록 저하하는 근본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다. 다시 말해 경제 부문만이 앞선다고 전체 시스템이 선진화되는 건 아니고, 정치, 사회, 문화 등 하위 시스템들이 함께 보조를 맞출 때 전체 시스템이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국가 시스템에는 ‘최소의 법칙’(Law of Minimum)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리비히(J. Liebig)라는 독일 식물학자의 이론인데, ‘식물의 성장을 결정하는 것은 넘치는 요소가 아니라 가장 부족한 요소’라는 법칙이다. 다시 말하면 식물의 성장은 최대 요소가 아니라 최소 요소가 결정한다는 의미이다. 예컨대 식물의 성장에 필요한 여러 필수요소들(질소, 인산, 칼륨 등) 중 어느 하나가 부족하면 다른 것이 아무리 많아도 제대로 성장할 수 없다는 뜻이다. 마찬가지로 전체 시스템의 수준은 구성 요소들 중 가장 낮은 수준의 요소와 일치한다. 가령 정치 수준이 낮다면 경제가 아무리 선진적이라 하더라도 전체 시스템은 정치 수준을 면치 못하게 된다.

○ 성장, 자유, 화합으로 선진 경제 기반 구축

결국 한국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국내 정치·경제·사회 시스템이 낙후하여 시대 흐름에 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유발되는 국가 전체의 생산성 하락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세계 경제 트렌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저성장과 갈등, 분열이라는 전환기적 혼란에 빠져 있는 한국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 경제의 성장과 선진화를 위한 정책적 과제는(Policy Implication)는 경제 성장 전략 추구, 자유 시장 원리 신장, 국민 화합, 리더십의 회복이라 할 수 있다.

우선 경제 정책 추진의 최우선 순위를 지금의 저성장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한 성장 전략 수립에 두어야 한다. 무엇보다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소득과 소비를 늘려 다시금 성장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는 데 최대한의 정책적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특히 단순 물량 확대 투자에서 벗어나 신기술 혁신에 바탕을 둔 혁신 주도 성장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자유 시장 경제를 신장

시켜야 한다. 자율과 경쟁이라는 시장 경제 원리의 정착은 자원의 합리적인 배분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성장 능력을 극대화시켜 준다. 물론, 경제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의 확충 등을 통해 시장의 역기능을 보완하는 일 역시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대립과 갈등에 의한 국력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사회 안정과 국민 화합을 이루어야 한다. 신의와 성실성에 입각한 사회 구성원간의 신뢰 관계가 형성될 때 국민적 사회 통합력이 강화될 수 있다. 사회 구성원간의 신뢰 관계가 제고되고 사회 통합이 이루어지기 위한 기본 전제 조건은 주어진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일이다.

또한 인간의 창의성과 지적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教育)과 훈련(訓練, Discipline) 시스템도 지속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사회 시스템의 선진화나 효율성의 증대 여부는 무엇보다 교육과 훈련의 성과에 달려 있다. 특히 새로운 시대에는 인간의 지적 능력이 가장 중요시되고 창조적 가치의 생산이 인간 활동의 보람이고 목표가 되기 때문에 이를 위한 교육을 시대 변화에 맞게 혁신해 나가야 한다. 다시 말해 다양성과 개성이 존중되며 새로운 가치 창조가 중시되는 교육 개혁 없이는 사회 시스템의 효율성은 증진될 수 없으며, 지금과 같이 입시 위주의 암기식 교육으로는 창조성과 다양성이 강조되는 21세기 경쟁에서 한국 경제는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다.

한국 경제의 전환기적 혼란을 극복하고 선진 경제국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역량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국민의 화합과 협력 그리고 비전 공유를 통해 국력을 결집하여 국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리더십이 경제 회복의 선결 과제인 것이다.

□ 지수 경제와 민생 경제의 괴리 - 2006년 국내 경제의 특징과 문제점

국내 경제는 2006년에 연간 5% 수준의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국민 총소득의 정체로 인하여 체감 경기가 살아나지 못하는 ‘지수 경제와 민생 경제의 괴리’ 현상이 나타났다. 또한 2006년 국내 경제는 상반기에 경기가 회복 양상을 보이다가 하반기 이후에 둔화되는 ‘상고 하저(上高 下低)’의 경기 패턴을 나타냈다. 하반기 이후 경기 둔화세가 나타난 것은 소비 회복세가 약화되고 설비투자의 회복이 미약한 가운데, 건설투자는 감소 양상을 나타내는 내수 부진 현상이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내 경제의 일자리 창출력이 크게 약화되어, 고용 시장은 여전히 침체된 모습을 나타냈다. 특히 하반기에는 성장률이 낮아짐에도 불구하고, 유가 폭등 등에 의한 수입 물가 급등으로 생활 물가의 불안 현상이 나타나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확산되기도 하였다. 한편 수출 경기는 세계 경제의 고성장으로 세계 교역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호조세를 지속하였다. 그러나 국제 유가 상승에 따라 원자재 수입이 급증하고, 환율 하락에 의한 해외여행 확대 등으로 경상수지 흑자는 큰 폭으로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국내 금융 시장은 국내 경기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강세 현상을 표출하며 실물 경제와 괴리된 움직임을 보였다. 우선 외환 시장에서 국내 경상수지 흑자폭이 축소됨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달러화의 약세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원화 환율이 급락하였다. 더욱이 일본에 비해 국내 자본수지가 막대한 흑자를 기록함에 따라, 원/달러 환율 하락 속도가 엔/달러 환율 하락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어 원/엔 환율은 700원대까지 하락하였다. 종합주가지수는 외국인 주식 투자 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출되고, 국내 경기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추세 속에서도, 간접 펀드 수요 증가 등으로 주식 시장의 수급 조건이 개선되어 사상 최고치인 1,400p대까지 상승하였다. 한편 채권 시장에서는 국내 경기의 불확실성으로 장기 금리는 하락하였으나, 정책 금리 인상에 따르는 단기 금리 상승세로 장·단기 금리차가 축소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처럼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인 2006년 국내 경제는 실물 부문에서는 국민 총소득의 부진과 생활 물가 상승, 대외 거래의 실익 감소, 금융 측면에서는 금융 시장 불안정 확대 현상이 나타났으며, 그 결과 저성장 함정의 고착화라는 특징적인 양상을 나타냈다.

○ 국민총소득의 부진과 생활 물가 상승

2006년 국내 경제를 살펴보면, 성장률은 2005년에 비해 높아졌으나 국민 총소득이 부진한 가운데, 생활 물가는 상승세를 나타내어 전반적으로 민생 경제의 활력이 크게 저하되었다.

소비 부진 : 우선 GDP (Gross Domestic Product, 국내총생산)의 약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소비 부문의 회복세가 급격하게 둔화되었다. 국민계정상 민간소비는 2006년 1/4분기에 전년동기대비 4.8%로 2005년 연간 증가율인 3.2%를 크게 상회하였으나, 이후 증가율이 급락세를 보이며 3/4분기에는 4.0%까지 하락하였다. 이와 같이 소비 회복세가 지속력을 가지지 못하고 1년여 만에 다시 둔화된 것은 가계의 소비 여력이 확충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저성장이 장기화됨에 따라 경제 활력과 고용 창출력이 크게 약화되고, 이에 따라 소비 성향이 높은 중산층 및 저소득 계층의 근로 소득이 크게 늘지 못한 것이다. 둘째 유가 급등에 따르는 수입 물가 상승으로 교역조건마저 악화됨에 따라 국민들의 실질 구매력이 정체되었던 것도 소비 부진을 가져온 원인으로 들 수 있다. 또한 가계 부채의 급증이 소비 여력을 크게 위축시켰다. 2006년 3/4분기말 가계 신용 잔액은 558.8조 원으로 전년말 대비 7.2%가 증가하였으며, 2001년 초의 266조 원에 비해서는 두 배 이상으로 급증하였다. 이는 가계의 이자 비용 및 상환 부담을 증가시켜 소비 부진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정부의 강력한 투기 억제 정책에 따르는 부동산 거래 위축 등으로 자산 소득의 증가가 전체 소비를 진작시키는 효과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

설비투자 미흡 : 국내 설비투자 증가율은 2005년 5% 내외에서 2006년 1~3/4분기에 8%대까지 상승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설비투자의 회복세가 경기를 진작시킬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외환위기 이후 약 10년 동안 국내 실질 설비투자 규모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볼 때, 10% 미

만의 설비투자 증가율은 대규모 설비 확장보다는 대체 투자나 유지 보수 정도에 그치는 수준에 불과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같이 2006년 투자 회복세가 미약한 수준에 그쳤던 원인은 우선 기업의 수익성이, 내수 시장이 부진한 가운데 환율이 하락하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급격하게 악화되어 투자 여력이 위축된 데서 찾을 수 있다. 또한 하반기에 들어 향후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대되어 기업의 투자 심리가 악화된 것도 투자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대기업에 대한 출자총액제한, 수도권 공장 설립 제한 등 핵심 규제들이 존속된 것도 투자 부진을 지속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건설투자 침체 : 건설투자는 2006년 1~3/4분기에 전년 대비 1%대의 감소세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건설 투자 침체의 원인은 먼저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의 부작용으로 민간 건설 경기가 큰 타격을 받았던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감안하여 정부는 2006년 하반기부터 행정 도시 및 기업 도시 건설 등 종합 투자 계획을 통해 건설 경기의 침체를 막아보려 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건설 투자 확대 정책은 그 충당 재원의 상당 부분을 민간이 부담하는 방식인 BTL¹⁾에 의존하였다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즉 정부의 예상과는 달리 민간의 참여가 부진하여 공공 부문 투자가 민간 건설 경기의 침체를 보완하는 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고용 부진 지속 : 이러한 내수 경기 부진은 고용 시장의 침체로 이어졌다. 외형적인 실업률 지표는 3%대 초반으로 2005년의 3.7%보다는 낮아졌다. 그러나 고용 시장의 구조적 문제는 오히려 악화되었다. 10월의 15~29세 청년 실업자 수는 36.4만 명으로 전체 실업자 78.9만 명의 46.1%를 차지하여, 청년실업률은 이전해 같은 달의 7.2%에서 8.0%로 급등하였다. 특히 2006년 경제 성장률이 2005년에 비해 약

1) BTL(Build Transfer Lease)이란 민간이 자금을 투자해 공공 시설을 건설 (Build)하고, 민간은 시설 완공 시점에서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Transfer)하는 대신 일정 기간 동안 시설의 사용 수익 권한을 획득하게 된다. 이에 따라 민간은 이 기간 동안 시설을 정부에 임대(Lease)하고 그 임대료를 받아 시설투자비를 회수하는 투자 방식이다.

1%p 가까이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수 경기는 부진세를 지속하여 구직 기회는 크게 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취업자나 실업자에 포함되지 않아 실업률에 잡히지 않는 구직단념자는 작년 수준인 약 12만 명에 달하고 있다.

생활 물가 상승 : 특히 하반기에는 성장률이 낮아짐에도 불구하고, 유가 급상승 등에 의한 수입 물가 급등으로 생활 물가의 불안 현상이 나타나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기도 하였다. 우선 국내 소비자 물가는 10월까지 2%대 중반의 안정적인 수준을 기록하였다. 또한 한국은행 통화정책의 기준 물가 지수인 핵심물가도 2% 내외를 유지하여 물가 안정 목표인 2.5~3.5% 수준에 미치지 못하였다. 그러나 국제 유가 급등에 따르는 시차 효과가 하반기에 국내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여 하반기 이후 전반적으로 물가 상승세가 높아졌다. 특히 서민들의 체감 물가 수준을 나타내 주는 생활 물가는 소비자 물가나 핵심 물가보다 훨씬 높은 3%대의 상승률을 지속하며, 저성장기에 물가마저 높은 스태그플레이션적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 대외 거래의 실익 감소

국내 수출은 2006년에도 높은 증가세를 기록하였으나, 수입 증가세가 높고 서비스 수지 적자가 늘어나 대외 거래의 실익이 크게 감소하였다.

수출 구조 악화 : 내수 경기가 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수출 경기는 2006년에도 호황을 누렸다. 2006년 1~11월의 수출 증가율은 2005년의 12%를 상회하는 약 14%대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수출 경기 호조는 2006년 세계 경제 성장세가 전년에 비해 높아지고 이에 따라 교역도 증가세가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통화기금)에 따르면 세계 교역량 증가율은 2005년 7.4%에서 2006년에 8.9%로 크게 상승하였다.

그러나 업종별로는 수출 경기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다. 우선 반도체 수출 증가율은 2005년의 약 13%의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여, 20%에 가까운 호황을 누렸다. 또한 같은 기간 자동차 수출은 전년대비 10% 내외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석유화학도 14%대의 증가세를 보여 호조세를 유지하였다. 반면 경공업 분야의 수출은 전년에 이어 2006년에도 감소세에서 벗어나지 못하였고, 특히 LCD와 컴퓨터 부문은 세계적 공급 과잉 문제가 해소되지 않아 연간 10%대의 감소세를 기록하였다.

또한 지역별 수출 경기도 양극화 현상을 나타냈다. 우선 수출 대상국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에 대한 수출은 그 증가율이 2005년의 약 24%보다는 하락하였지만 10%대를 유지하며 증가세를 지속하였다. 또한 EU 지역과 일본에 대한 수출은 전년에 비해 각각 약 15%, 10%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그러나 미국에 대한 수출은 비록 2005년의 감소세에서 벗어나기는 하였지만 약 5%대의 저조한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원자재 수입 급증 : 2006년 수입 증가율은 약 20% 내외로 2005년의 16.4%보다 높아졌다. 이와 같이 내수 경기가 부진한 데에도 불구하고 수입 증가율이 크게 높아진 것은 국제 유가 상승으로 원자재 수입이 급증하였기 때문이다. 국내 원유 도입 물량은 크게 변화되지 않은 가운데, 원유 도입 단가는 2005년 배럴당 약 50달러대에서 2006년 9월에는 약 70달러 내외까지 상승하였다. 이에 따라 전체 수입에서 원유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의 약 16%에서 18%로 상승하였다. 또한 소비재 수입도 20%대 후반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국내 경기적 요인보다는 환율 하락에 따라 구매력이 상승하고, 고가 사치품 수입이 증가한 데 주요 원인이 있다. 그러나 자본재 수입 증가율은 국내 설비투자 부진의 영향으로 2005년 수준인 10%를 조금 넘는 증가세에 머물렀다.

경상수지 흑자 급감 : 경상수지는 수입 급증에 따른 상품 수지 흑자 축소, 환율 하락에 의한 서비스 수지 적자 확대 등의 영향으로 흑자폭이 2005년 166억 달러에서 2006년 10월 현재 17억 달러로 급감하였다. 특히 서비스 수지 적자폭은 여행수지 적자가 크게 확대되면서 이미 1~10월까지 155억 달러를 기록하며, 2005년의 적자폭인 131억 달러를 크게 상회하였다. 반면 자본수지는 외국인 주식 투자 자금의 순유출(1~11월말까지 12조 3,000억 원)에도 불구하고 국내 은행들의 외화 차입 급증 등으로 약 130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국제 수지의 불균형은 원화 환율이 국내 경기 요인을 반영하지 못하고 달러화나 엔화 등 주요 기축 통화에 대해 오히려 강세를 나타내는 근본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 금융 시장 불안정 확대

국내 금융 시장은 국내 경기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강세 현상을 표출하며 실물 경제와 괴리된 움직임을 보였다.

원화 환율 급락 : 외환 시장에서 국내 경상수지 흑자폭이 크게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달러화의 약세 기조로 인해 원화 환율이 급락하였다. 연초 1,008원에서 출발한 원화 환율은 하락세를 지속하여 연말에는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 900원 선에 근접하였다. 원화 환율이 강세를 나타내었던 것은 글로벌 달러 약세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 외환 시장에 달러 유동성마저 급증하였기 때문이다. 우선 달러화가 미 경상수지 적자 문제 지속, 미국 경기 하강 우려 등으로 주요 기축 통화에 대해 약세를 지속하였던 것이 원화 환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와 더불어 외국인 주식 투자 자금의 유출에도 불구하고 국내 은행들의 외화 차입 급증, 수출 기업들의 환 리스크 헷지를 위한 선물환 매도 등으로 국내 외환 시장에 달러 유동성이 풍부해져, 원화 환율 하락이 가속화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더욱이 국내 자본수지가 막대한 흑자를 기록함에 따라, 원/달러 환율 하락 속도가 엔/달러 환율 하락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어 원/엔 환율은 700원대까지 하락하였다. 원/100엔 환율은 연초 860원에서 출발하였으나, 하반기에 들어 800원선이 붕괴되면서, 1997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원/엔 환율의 급락은 한국과 일본의 외환 시장에서 수급 상황이 상이했던 데에 그 원인이 있다. 일본의 경우 일본은행의 저금리 기조로 일본 자금이 외국으로 유출되는 엔캐리(Yen-carry) 자금이 확대됨에 따라, 경상수지 흑자로 유입되는 달러화가 자본수지 적자로 유출되는 달러화로 상쇄되어 글로벌 달러화의 약세에도 불구하고 엔/달러 환율은 완만한 강세를 보였다. 반면 한국은 이와 반대로 국내 은행들의 달러화 수요 확대, 단기 외채 증가 등으로 자본수지 흑자가 지속되었다.

주식 시장의 조정 장기화 : 종합주가지수는 외국인 주식 투자 자금이 유출되고 국내 경기의 불확실성이 증폭됨에도 불구하고, 간접 펀드 수요 증가 등에 의한 수급 조건의 개선으로 1,400p대까지 올라가는 상승세를 나타냈다. 주식 시장은 2006년 초반에 경기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호조세를 보였다. 하지만 2006년 외국인 투자자들의 지속적인 순매도와 하반기에 들어 나타나기 시작한 경기 지표 악화 등으로 조정 양상이 이어졌다. 특히 2006년 1~11월중 외국인 투자자는 우량주와 전기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약 2조 원을 순매도하여 주식시가총액 대비 외국인투자자의 보유비중은 2005년말 40%대에서 37%로 하락하였다.

장단기 금리차의 축소 : 한편 채권 시장에서는 국내 경기의 불확실성으로 장기 금리는 하락하였으나, 정책 금리 인상에 따르는 단기 금리 상승세로 장단기 금리차가 축소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단기금리인 CD(91일) 금리는 2005년말 약 4.1%에서 하반기에 4%대 중후반까지 상승하였던 반면, 장기금리인 국고채(3년) 금리는 오히려 5.1%에서 4%대로 하락하였다. 이에 따라 장단기 금리차는 연초 1%p 내외에서 0.1%p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크게 축소되었다. 단기 금리 상승은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를 위한 한국은행의 콜금리 인상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장기 금리 하락은 국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증가하는 가운데 기관투자가들을 중심으로 국고채 등 안전 자산 선호 현상이 확산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 저성장 함정의 고착화

2006년에도 지속되었던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점으로는 교역 조건 악화에 의한 구매력 급감, 성장잠재력 저하, 소득 양극화 심화와 중산층 약화, 세계와 국내 경기 격차 지속, 비즈니스 사이클의 단축 등을 들 수 있다. 우선 수출 호황에도 교역 조건이 악화되어 가계와 기업의 구매력이 급감하였으며, 외환위기 이후 10년 동안 투자 규모가 거의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함에 따라 성장잠재력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경제는 세계 경제성장률을 4년 연속 따라가지 못하는 사상 초유의 저성장 함정에 빠지게 되었다. 더구나 중산층마저 약화되어 소득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었다. 비록 정부가 이러한 분배 문제를 해결하고자 복지 정책 비중을 높여왔으나, 성장이 바탕이 되지 못한 상황에서 정책의 효과는 나타나지 못하였다. 특히 이러한 성장과 분배의 구조적 문제가 장기간 지속되는 가운데, 유가 급등, 환율 하락,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 등의 잦은 대외적인 충격들이 경제의 불확실성마저 증폭시켜 외환위기 이후 국내 경기 사이클이 크게 단축되는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다.

교역 조건 악화 : 먼저 국내 수출이 호조를 보였으나 수출 단가 지수 하락과 수입 단가 지수 상승으로 교역 조건이 크게 악화되었다. 1단위 수출 대금으로 수입할 수 있는 물량을 나타내는 순상품 교역 조건은 2000년 100에서 2006년 3/4분기에는 71.2로 크게 하락하였다. 교역 조건의 악화는 교역의 실익을 축소시켜, 실질 무역 손실액은 2005년 4/4분기에 13.8조 원에서 2006년 3/4분기에는 17.9조 원까지 급

증하였다. 이는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르는 수입 물가 지수 급등에 영향을 받은 측면이 크지만, 수출 단가가 원화 환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국내 수출품들의 시장 지배력이 약하여 수입 단가 상승세를 따라가지 못 했던 것도 원인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교역 조건 악화는 국민들의 실질 구매력을 약화시켜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는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국내 경제 주체들의 구매력과 체감 경기를 나타내는 국민총소득(GNI)²⁾은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인 4%대 후반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1%대에 그쳤다.

중산층 약화와 소득 양극화 심화 : 특히 저성장이 장기화됨에 따라 경제의 고용 창출력이 훼손되어 중산층마저 축소되고 있어, 한국 경제가 앞으로도 저성장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악순환 구조가 지속되었다. 중산층이 붕괴되고 있다는 간접적 증거를 보여주는, 법원에 신청된 개인 파산 접수 건수는 2003년에는 채 1만 명도 되지 않았으나, 불과 3년여 만인 2006년에는 10만 명 내외로 급증하였다. 이러한 중산층 붕괴는 소득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소득 양극화 정도를 보여주는 전국 가구의 소득 5분위 배율³⁾은 2006년 3/4 분기에 7.79배를 기록하여, 통계 조사가 시작된 2003년 이후 가장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잠재력 저하 : 문제는 앞으로도 한국 경제가 저성장 함정에서 쉽게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투자 부진이 지속되어 성장의 엔진인 자본 축적이 정체되고 있기 때문이다. 외환위기 이후 국내 실질 설비투자 규모는 외환위기 직전인 1996년 수준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건설투자까지 고려해 보아도 총고

2) GDP가 생산 측면에서 고려된 외형상의 경제성장률인 반면, GNI는 무역에서 발생하는 손익 등을 고려하여 국민들의 실질 구매력을 평가 할 수 있는 지표이다.

3) 소득 5분위 배율이란 조사 대상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한 다음, 최하위 가구부터 최상위 가구까지 5구간으로 등분하여, 5분위 (최고소득층) 평균 소득을 1분위 (최저소득층) 소득으로 나눈 것으로 지니계수와 더불어 계층간 소득 격차의 대표적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정투자 증가율은 2003년 이후 2%대로 크게 낮아져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투자 부진은 성장잠재력 하락으로 이어져,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90년대 6% 내외에서, 2001~04년에는 4%대 후반으로, 2005년 이후에는 4% 내외로 크게 낮아졌다.

세계와 국내 경기 격차 지속 : 이러한 성장 잠재력 약화는 결국 한국 경제의 저성장이 장기화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한국 경제는 2003년 이후 2006년까지 4년 연속 세계 경제성장률을 하회하는 저성장을 지속하였다. 특히 한국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경제 발전 단계상에 위치해 있는 동아시아 경쟁국들의 성장률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아직 한국 경제가 경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이행하는 단계에 위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한국은 상당기간 동안 세계 경제 성장률보다 빠른 성장세를 보여야 한다.

비즈니스 사이클의 단축 : 마지막으로 90년대 이후 국내 경기 순환 주기가 급속히 축소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기 사이클 주기는 외환위기 이전에는 상승기가 평균 34개월이었으나, 2003년 이후에는 약 12개월 내외로 단축되었다. 이러한 경기 상승기의 사이클 단축은 경제의 성장력이 약화된 가운데, 유가 급등, 환율 하락,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 등의 잦은 대외적인 충격들이 경제의 불확실성마저 증폭시켰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문제는 이와 같이 경기 국면의 방향성이 자주 변하게 될 경우, 민간 주체들의 미래 불확실성이 높아져 투자와 소비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최근 수년간 소비자기대지수(CSI)가 연초에 상승하다 연말에 하락하는 상고하저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잦은 방향성의 변화를 보이는 것은 이러한 민간 주체들의 불안 심리를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내우외환이 우려되는 경제 여건 변화 - 2007년 대내외 여건 전망

2007년 한국 경제는 대외적으로는 세계 경기의 동반 둔화, 교역 여건의 전반적 악화, 중국발 글로벌 인플레이션 확산 우려와 같은 어려운 여건에 직면하는 한편, 대내적으로는 원화 가치 급등락에 의한 환위험 증대와 경상수지 적자 확대, 북핵 위기와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에 따르는 경제 심리 위축, 대선의 정치 경제학 (Political Economy)에 의한 경제 불확실성 증폭과 같은 힘든 상황에 봉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외 여건)

○ 세계 경기의 동반 둔화 (Global Recession)

2005년 세계 경제는 주요국들의 경제가 경기 회복 또는 경기 호황을 보여 모두 경기 확장 국면에 위치하는 동반 경기 상승(Global Expansion)의 모습을 보였다. 2006년 하반기에 들어 미국 경제의 성장률이 급격하게 하락하고 EU와 일본 경제의 회복세는 지속되는 세계 경제의 경기 비동조화(Decoupling) 양상이 나타났다. 미국 경제는 2006년 1/4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대비 연율 5.6%를 기록할 정도로 초고속 성장을 나타냈으나, 3/4분기에 1.6%로 성장세가 급격하게 둔화되었다. 반면 EU의 경우, 역내 주요 경제 대국인 프랑스의 경제성장률 상승, 독일의 산업 생산 호조 등에 힘입어 2005년 수준과 비슷한 1% 내외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일본도 소비 및 기업 투자의 회복세가 지속되어 2%대의 양호한 성장률을 나타냈다. 특히 미국과 더불어 세계 경제의 양대 성장 동력으로 부상한 중국 경제도 고정자 산투자와 수출 호조에 힘입어 전년대비 10%대 이상의 초고속 성장을 유지하였다.

2007년에는 미국 경기의 둔화세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중국, EU, 일본 경기도 하강 국면에 진입하는 세계 경제의 동반 경기 하강(Global Recession)이 예상된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 경제는 성장 주력 부문인 내수 부문이 크게 부진한 모습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06년 하반기에 들어 주택 경기 하강에 따라 나타

나고 있는 소비 부진과, 기업들의 투자 위축 양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EU 경제는 2006년 하반기까지는 회복세가 지속되었으나, 2007년 상반기부터 경제성장률이 큰 폭으로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2007년 EU의 경제성장률은 2006년의 2%대 중반보다 낮은 2% 내외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대부분 역내국들의 재정적자가 EU의 안정성장협약 기준인 GDP 대비 3%를 초과하고 있고, 유로화 가치 상승으로 인한 수출 둔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일본 경제의 경우 장기 불황에서 탈출하는 회복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나, 미국 경기 둔화에 따르는 대미(對美) 수출 부진으로 경제성장률은 2006년 2%대 후반에서 2007년에는 2% 내외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미국 경기가 급랭하고 엔화의 급격한 절상이 발생할 경우에, 현재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민간소비와 기업투자가 위축되어 일본의 경제성장률이 1%대로 하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의 경우는 예년과 달리 부동산 투자 규제, 금리 인상, 설비 투자 억제 등 정부의 긴축 정책이 강력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2006년 하반기 이후 성장률 둔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2007년 중국 경제가 한 자릿수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교역 여건의 전반적 악화

미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의 동반 둔화로 인해 세계 교역량의 증가세가 약화되고, 미국 달러화의 약세 기조가 지속되며, 통상 마찰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더해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으로 2006년 하반기부터 하락세를 보이던 국제 유가 역시 다시 반등세를 나타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세계 교역량 증가세 약화 : 세계 경제의 동반 부진으로 세계 교역량 증가율 둔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경기 하강 국면으로 진입함에 따라 수입 수요가 둔화되어, 개도국들의 수출 부진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IMF는 세계 상품의 주요 수요처인 선진국들의 수입 증가율이 2006년 7.5%에서 2007년에는 6.0%까지 하락하고, 한국 등의 신흥공업국(NIEs, Newly Industrialized Economies)의 수출 증가율은 같은 기간 8.9%에서 7.9%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 달러화 약세 기조 지속 : 또한 2007년 미 달러화는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확대, 미국 경기 둔화, 중국을 비롯한 달러화 과다 보유국들의 외환보유 다변화 정책 추진,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상 중단에 의한 미·유럽간 금리 격차 축소 등의 영향으로 약세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2006년에 사상 최대치인 약 8,000억 달러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은 2006년에 6%대 중반에서 2007년에는 7% 내외로 확대될 것이 예상된다. 또한 미국과 다른 국가들간의 금리 격차 축소도 달러화 약세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미국 연방은행은 경기의 하방 리스크를 우려하여 기준 금리를 2006년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인상하더라도 소폭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반면, 유럽 중앙은행은 최소한 2006년 10월에 기준금리를 3.25%로 인상한데 이어 2007년에는 최소한 4% 내외 수준까지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에 따라 국제투자은행들은 유로화의 경우 2007년말 최소 1.3달러 이상으로 상승하고, 같은 기간에 엔/달러 환율도 2006년말 수준보다 10엔 정도 하락한 106엔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제 유가의 재반등 : 2006년 하반기에 국제 유가는 하절기의 수요 증가세가 약화되고, 중동 정세의 안정 등에 의해 공급 불안 요인이 감소되는 가운데, 투기 자금도 이탈하여 하향 안정세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유가 하락세가 2007년에도 이어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비록 세계 경기의 동반 둔화에 따라 선진국의 석유 수요가 둔화되기는 하겠지만, BRICs 등 개도국의 수요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라크 등에서 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 요인이 상존하고 있고, 나이지리아와 같은 일부 산유국들의 내전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OPEC의 석유 생산 여력의 약화 및 감산 조치 등과 같은 시장 요인도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공급 측면에서 OPEC의 추가 생산 여력이 1980년대 중반 일(日)평균 최대 1,000만 배럴에서, 2003년 이후 100만 배럴 내외로 급격히 약화되어, 수요 증가에 대한 대응 능력이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다. 더구나 OPEC은 2006년 10월에 일일(一日) 생산량 상한선을 2,800만 배럴에서 100만 배럴을 감산하는 조치를 단행하는 등 가격 안정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자원민족주의 성향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수급 요인의 불안 요인이 실제로 현실화되면, 향후 국제 유

가는 하향 안정세가 이어지기보다는 다시 상승세로 반전될 가능성이 다소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통상 마찰 확대 : 한편 2007년 통상 여건은 세계 경제의 성장세 둔화에 따라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2007년 세계 경기 부진으로 주된 상품 수입국인 선진국과 상품 수출국인 개도국 및 중진국간의 통상 마찰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음으로 엘니뇨 현상과 같은 환경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선진국들의 유해물질 사용 규제, 온실 가스 규제, 생물 다양성 조약 등과 같은 비관세 장벽 성격의 환경 규제도 높아질 전망이다. 이미 EU는 납, 수은 등 중금속이 포함된 가전제품의 수입을 규제하고 있으며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은 80% 이상의 재활용을 의무화했다. 일본과 EU는 교토의정서를 근거로 온실 가스 감축 의무를 달성하지 못하는 국가들에 대해 수입 금지 및 범칙금을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편 최근 많은 국가들이 생물 다양성 조약에 근거하여 유전자 변형 생물의 이송 절차를 규정하고 과학적으로 안정성이 결여될 경우에 해당 제품에 대한 수입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대내적으로는 2007년 3월이 협상 타결 시한인 한미 FTA 과정에서 한미간 이견 해소를 둘러싼 논란도 고조될 것이다.

○ 중국發 글로벌 인플레이션 확산 우려

중국 경제의 임금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중국내 물가 불안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중국 제품의 수출 단가 상승으로 이어져 미국, 일본 등 주요 수입국 물가를 자극하고 나아가 세계 인플레이를 초래할 가능성을 높여줄 것으로 우려된다. 2006년 하반기 이후 중국 제품의 가격은 임금과 원자재 가격의 급등, 환경 규제 강화 등에 의해 상승 압력이 증대되었다. 1998년에 0.2%에 불과했던 임금증가율은 2005년에 18.2%까지 상승하였으며, 원자재, 연료, 동력원 등의 중국내 매입 가격도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특히 중국 정부의 환경 규제 강화로 중국 기업들의 제조 원가의 추가 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 결과, 과거 1%대에 불과하던 중국의 생산자 물가 상승률이 2006년에는 3%대로 급등하였다. 만약 중국 제품의 수출 가격이 상승할 경우, 이는 대중(對中) 수입 비중이 큰 국가들의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이

어제 중국발 세계 인플레이션으로 발전할 수가 있다. 중국 경제 전문가인 앤디 시에(Andy Xie)는 중국 기업들이 생산 비용 상승분을 수출 가격에 전가할 경우, 미국에게는 0.5%p, 세계적으로는 0.7%p의 추가 인플레이 압력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내 여건)

○ 원화 가치 급등락에 의한 환위험 증대

향후 원화의 달러화에 대한 가치는 대외 요인과 대내 요인의 상반된 방향성으로 인해 급등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달러 대 원화 환율의 변동폭은 2005년 약 60원에서 2006년에 80원으로 확대되었다. 2007년 원화 환율의 전반적인 기조는 글로벌 달러화 약세의 영향으로 2006년에 비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를 상쇄할 정도의 강력한 국내적 절하 요인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 환율 급변동의 가능성이 증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승 요인으로는 국내 경기 침체, 지정학적 리스크(Geopolitical Risk) 등을 들 수가 있다.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할 때 달러당 원화 환율은 최저 800원대에서 최고 1,000원대 사이에서 급등락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문제는 국내 경기가 환율의 방향성보다 환율 변동성에 더 큰 악영향을 받을 우려가 높다는 데에 있다. 이는 환율 변동이 추세적으로 완만하게 이루어질 경우 국내 기업들이 이에 대해 어느 정도는 적응할 시간이 있지만, 예상 밖으로 급격하게 변동하는 경우 생산, 원자재 조달, 자금 확보, 투자 등 일련의 기업 활동에 불확실성이 증폭되어 결국 내수와 수출 부진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 북핵 위기와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2007년 남북 관계는 북핵 사태의 중장기화와 대선 정국 진입에 따르는 정부의 대북 포용 정책 추진의 제약 등의 대내외적인 불안 요인으로 정체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북핵 문제는 6자회담 재개 합의와 미국 중간선거에서의 민주당 압승 등의 영향으로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위기 국면으로 치달았던 2006년보다는 나아질 전망이다. 지난 10월 31일의 6자회담 재개 합의로 북핵 문제는 ‘제재와 위기’ 국면에서 ‘대화와 협상’ 국면으로 진입하였으며, 중간 선거 이후 미국의 대외 정책은 ‘힘 우선’의 일방주의에서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는 포용 정책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미국은 1994년의 제네바 합의 때와 달리 북한이 핵실험까지 한 만큼, 북한의 확실한 핵 폐기 의지를 확인해야 물질적 보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인 반면, 북한은 방코델타아시아의 북한 계좌 동결 해제와 북미 관계 정상화, 중유 공급 재개와 같은 에너지 지원 등의 약속이 선행되어야 핵 폐기에 나설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이로 인해 향후 북핵 문제는 6자회담의 틀은 유지되되, 구체적인 합의 도출과 이행 절차의 선후 관계 등에 대한 북미간 입장 차이로 난항이 예상된다.

한편, 남북 관계는 북핵 실험 이후 대북 협력에 대한 부정적 국내 여론과 대선 정국 진입에 따르는 대북 포용 정책 운용 폭의 제약 등으로 정체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UN 결의안을 준수하되, ‘한반도의 안정적 비핵화와 안보 위협 및 경제 불안 최소화’ 원칙을 견지함에 따라 추가적인 ‘상황 악화 예방’을 위해 기존의 남북 관계 유지에 역점을 둘 전망이다. 그러나 정부의 대북 포용 정책은 북핵 해법에 대한 한미간의 이견, 핵실험 이후 대북 협력에 대한 부정적인 국내 여론 확산, 여소야대 정국에서의 야당의 적극 반대 등으로 이전과 같은 추진력을 얻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정부의 특사 파견과 제재 국면 탈출을 위한 북측의 호응이 있을 경우에는 남북 관계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대선의 정치 경제학 (Political Economy)

2007년에는 국내 정치 행사 중 최대 행사인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는 해이다. 이에 따라 대중 인기에 치중하는 정치 논리가 합리성을 중시하는 경제 논리를 압도하여 국내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일 우려가 크다.

인기영합주의적 정책 우려 : 2007년 대선 정국이라는 특수한 정치 사회적 상황을 고려해볼 때, 경제 정책 방향은 선거를 의식한 정치 경제 논리(Political Economy)에 의해 작용될 우려가 높다. 문제는 이처럼 선거를 의식한 인기영합주의로 실현 가능성이 낮은 정책이 남발될 경우, 정책의 일관성이 사라지고, 부처간 정책 혼선 양상이 심화됨에 따라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경제 정책의 유효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면 무리한 경기 부양책은 재정 부담 증가로 이어져 조세나 국채 발행 증가를 유발함으로써, 민간 경제 활력이 위축되는 ‘재정의 구축(crowding out) 효과⁴⁾’를 발생시킬 수 있다.

재정 부담 증가 : 한편 2007년에 예상되는 재정 여건을 살펴보면, 우선 국가 채무액은 일반 회계의 적자보전 및 외평채 발행으로 인하여 2006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2007년에 예상되는 저성장으로 세입 여건이 개선되지 못하여 통합재정수지⁵⁾에서 사회보장성기금과 공적자금상환 소요액을 제외한 관리대상수지는 2006년 수준과 비슷한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복지 관련 지출 확대, 세금 감면 대상자의 축소 등으로 조세 부담률은 약 21% 내외까지 상승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재정 여건을 근거로 하면 2007년은 재정 지출 확대로 경기를 진작시키는 재정의 경기 조절 기능이 미약할 것으로 보인다.

4) 구축(crowding out) 효과란 정부의 확대재정정책으로 채권 공급이 증가함에 따라 이자율이 상승하여 민간소비와 투자 활동을 위축하는 효과를 말한다.

5) 일반 회계, 특별 회계, 정부관리기금으로 구성되어 있는 예산을 따로 분리하지 않고 하나로 합쳐 파악하는 회계 방식을 통해 나타나는 수지를 의미한다.

< 주요 현안 1 > 2007년 세계 경제의 9대 트렌드

이코노미스트誌 등 국내외 주요 기관의 전망 분석 자료를 토대로 2007년에 심화되거나, 새롭게 나타날 세계적인 트렌드를 분석해 본 결과, 정치경제, 거시, 산업, 경영, 기술, 금융, 지역, 사회, 문화 분야에서 9가지가 선정되었다.

미국 대외정책의 실용주의 강화 - 'free trade'에서 'fair trade'로

우선 정치경제적 측면에서는 미국의 대외정책이 과거보다 더 실용주의적인 방향으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시 말해 부시 정부가 추구하던 이상주의(idealism) 정책은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미국의 이익 증대를 도모하는 현실주의(realism) 정책이 보다 힘을 얻을 전망이다.⁶⁾

민주당의 중간 선거 승리⁷⁾로 인해 미국의 외교 정책은 2002년에 선언된 이른바 '부시 독트린(Bush Doctrine)⁸⁾'을 바탕으로 한 '이상주의(idealism)'보다 '현실주의(realism)'적인 색채가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중간 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ABC방송의 여론조사에서는 유권자들의 63%가 이라크 전을 지속할 필요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결국 이것은 '부시 독트린'에 대한 국민들의 거부 의사가 중간 선거를 통해 표출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하지만 민주당의 우세가 미국이 그동안 추구해 온 대외 팽창적인 정책 자체를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다만 미국의 외

6) 현실주의(realism)는 국가가 이상이나 윤리보다는 이익을 위해서 행동해야 한다는 믿음을 뜻하는데 반해 이상주의(idealism)는 이상이나 윤리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7) 2006년 11월 7일 미국의 중간 선거 결과 민주당이 1994년 소위 '공화당 혁명' 이후 처음으로 상원에서 51석(민주당과 가까운 2명의 무소속 의원을 포함), 하원에서 232석을 획득함으로써 다수당이 되었다.

8) 부시대통령이 2002년 6월 1일 미국 육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미국 외교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선제공격, 일방주의, 압도적인 군사력 유지, 민주주의의 확산)을 제시하였다.

교정책이 미국이 지향하는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상대 국가에 일방적으로 이식하려는 작업 대신 국익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선회될 것이라는 기대는 가능하다.

한편 민주당의 중간선거 승리는 미국의 통상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번 중간 선거에서는 100여 명의 민주당 후보들이 자유무역을 포함한 공장의 해외 이전 및 대기업 특권에 대한 반대, 최저임금 인상을 내걸고 선거 운동을 벌였다. 민주당의 승리는 이러한 정책 슬로건에 대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미국 근로자들이 적극 지지함으로써 성취될 수 있었다. 따라서 민주당은 이들의 요구를 통상 정책 수립시 반영하고자 할 것이다. 더욱이 현재 민주당 국회의원의 이념적인 분포에서 보수적인 Blue-Dog Democrats⁹⁾나 New Democrats¹⁰⁾ 못지않게 민주당의 기본 이념에 충실한 진보적인 Progressive Democrats¹¹⁾ 성향의 국회의원이 71명으로 적지 않은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 세력이 통상정책 변화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¹²⁾ 결국 산업보호에 역점을 두는 민주당의 '공정무역(fair trade)'이 상대국의 완전 개방을 강요하는 '자유무역(free trade)'보다 더 큰 힘을 얻을 가능성이 크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의 승리는 이라크 전쟁에 대한 반대 여론으로부터 큰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향후 미국 정부의 북핵 문제에 대한 접근 방법은 대결보다 대화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자동차와 같이 미국 내에서 노조 영향력이 강한 산업 부문에 대해 시장 개방 압력이 높아질 수 있지만, 민주당에 대한 지지세가 약한 농업 부문에서는 이전보다 통상 압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9) 중도보수적인 민주당 하원의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1994년 민주당 내 보수적인 인사들이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10) 1988년의 대통령 선거를 통해 중도 우익의 기치를 내걸고 민주당에 등장하였고 현재 민주당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다.

11) 진보적인 민주당 하원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2004년 민주당 전당 대회를 계기로 등장했다.

12) William Greider "Watershed," *The Nation*, 2006. 12. 4 를 참조.

Global Gapitalism 확산 - 세계적인 경제 양극화 현상 심화

거시 경제 측면에서는 세계적으로 경제 양극화 현상(Global Gapitalism)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Global Gapitalism이란 경쟁원리와 효율성을 중시하는 자본주의 경제의 글로벌화가 진행됨에 따라, 소득과 교육 등의 양극화 문제가 전 세계로 확산되는 현상을 지칭한다. 미국, 프랑스, 일본 등에서는 고용 시장을 중심으로 양극화가 진행 중이며, 특히 미국에서는 생명을 다루는 의료 시장에서 고소득층 전용 병원이 등장하는 등 양극화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양극화는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어 기업의 경영 전략이 전환되고, 산업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었던 데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첫째 기업들은 계약 사원, 파트 타임어 활용 등에 의한 노동 비용 절감 전략과 함께 성과주의 보수체제 도입 등의 사원 간 경쟁 조장 전략을 채택하고 있으며, 그 결과 노동자간 소득 격차가 심화되었다. 둘째 1990년대 이후, 급속한 IT 산업의 발전과 기존 산업의 성숙화로 IT 관련 산업과 非IT 산업 간 성장의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만 보아도 2004년 IT 산업의 부가가치 생산 증가율은 25.1%인 반면, 非IT 산업의 부가가치 생산 증가율은 3.0%로 격차가 크게 벌어진 상황이다.

이러한 양극화 현상의 결과로 부의 세습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빈곤층이 등장하게 되었다. 우선 지식 사회가 진전됨에 따라 부유한 부모 밑에서 태어날 경우,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을 기회가 증대하게 되어 부가 세습되는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다시 말해 부유한 부모는 고수입이 보장되는 전문직에 자녀가 종사할 수 있도록 조기부터 자녀 교육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그렇지 못한 부모는 투자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부의 세습이 이루어지게 된다. 다음으로 기업 내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IT 기술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새로운 빈곤층이 등장하게 되었다. 학교에도 다니지 않고 고용되어 있지 않으며 직업훈련에도 참가하지 않는 청년 무직자인 니트(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族 및 시간제 근무를

통한 수입으로 생활하는 청년(Freeter, free arbeiter) 등이 새로운 빈곤층의 예라고 할 수 있다.

Global Warming Economics - 기후 변동 경제학 부상

산업적 측면에서는 환경 조건 악화에 따른 기후 급변동 등에 의한 경제 변화를 분석하는 기후 변동 경제학(Global Warming Economics)이 급부상할 전망이다. 엘니뇨 현상과 같은 기후 변동은 음료, 식품, 건강, 환경 등 생활의 기반이 되는 모든 것을 위협하여 1,2차 세계 대전 이상의 위기가 초래될 것으로 우려되는 것이 이의 배경이다.

기후 변동에 대비하지 않을 경우, 세계는 막대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지구의 환경 변화를 살펴보면, 가스 배출량 삭감 대응에 소홀히 했을 때 빠르면 2035년에 대기권내의 온실가스 농도는 산업혁명 이전 농도의 두 배가 될 것이며, 세계 평균 기온 또한 2도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¹³⁾ 한편 비용 면에서는 기후 변동에 따르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금부터라도 증가 추세의 이산화탄소 배출량(CO₂e)을 한계 수준인 550ppm 이하로(현재 430ppm) 억제할 경우 그 비용은 세계 GDP의 약 1%로 추정된다. 반면 정책 입안자가 배출량 감소를 위한 경제 수단을 수립하지 않아 550ppm을 넘게 된 후의 비용은 세계 GDP의 5~20%에 이르게 되어 최소 5배로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후 변동의 가장 대표적인 현상은 엘니뇨이다. 엘니뇨는 동절기 관련 산업 제품의 내수 및 수출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곡물 가격 상승에 의해 관련 제품 가격을 상승시킬 것이다. 세계 기상 관련 기관들은 엘니뇨가 2007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수출 및 산업 생산의 차질은 물론이요 물가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¹⁴⁾

13) 이하 니콜라스 스텐 'Stern Review on the economics of climate change(2006.11)'를 참조.

14) 엘니뇨 현상이란 동태평양 적도지역에서 고수온이 지속되는 현상으로 자연재해를 수반한다. 서울 경제 신문(2006. 10. 31)을 참조.

이와 같은 지구 온난화, 엘니뇨 등에 의해 장차 인류가 직면할 위험이 커지고 있어 선진국, 개발도상국 할 것 없이 기후 변동에 대한 대비책을 하루 빨리 수립해야 될 것이다. 최근 대비책의 일환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배출권에 대한 관리가 엄격해짐에 따라 탄소배출권 시장이 증가세에 놓여 있다. 2006년 9월 현재 세계 탄소배출권 시장은 2005년보다 두 배 증가한 215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앞으로도 배출권 거래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Megamerger 확산 - 異業종 간 대규모 M&A 추진

경영적 측면에서는 21세기로 접어들어 신기술 발전이 급속히 이루어지면서 향후 제조업·서비스업 간 또는 산업 내 異業종 간 대규모 M&A, 즉 거대 인수합병(Megamerger)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M&A는 다음과 같이 3가지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동종 업종 간 M&A이다. 1990년대 이후, 세계화의 급속한 진전과 IT 기술의 발달로 국경을 초월한 무한경쟁에 돌입하면서 금융기관 간, 자동차 업체 간 등 동종 업종 간 M&A가 활성화되었다. 두 번째 단계는 IT 기업이 주도한 M&A다. 2000년 전후, 급속한 주가 상승을 배경으로 자금력이 풍부해진 인터넷 기업이 동종 기업 뿐 아니라, 금융 기관이나 유통 업체 등 기존 산업 영역에 속한 기업들과의 M&A를 주도했다. 세 번째 단계는 異業종 간 M&A이다. 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내 異業종 간 M&A, 2차 산업인 제조업과 3차 산업인 서비스업 간 M&A가 발생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Megamerger(거대 인수합병)는 더욱 활성화될 것이다.

Business 2.0은 2006~16년에 Megamerger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가상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다.¹⁵⁾ 우선 2008년에 FedEx와 Starbucks가 Megamerger를 통해 새로운 회사를 설립했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24시간 운영되는 FedExpresso는 커피나 평면 TV 뿐 아니라 전 세계 상점간 운송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같은 해에 Microsoft사가 미국 최대 CDMA 사업자인 Verizon Wireless를 인수

15) 이하 Susanna Hammer, "How megamergers got cool again", *Business 2.0*, 2006.09.18이 제시한 사례를 요약, 정리.

하여 MSW사를 설립한다고 하자. 이 경우 MSW사는 고품질의 IP¹⁶⁾ 전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요 경쟁사인 Google을 제치고 이 부문에서 우위를 점하게 될 것이다. 한편 2010년에 Wal-mart와 General Motors가 Wal*Motors를 설립하게 되면, 소비자들은 월마트에서 General Motors의 제품을 할인된 가격에 구입함과 동시에 무료 정기 검사를 제공받게 될 것이다. 2013년에 Toyota와 Apple의 Megamerger로 iToyota가 설립되면 2016년 새로 출시하는 신차에는 자동 주차 기능과 Mac, iPod,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내장되어 있어 사무실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진화하는 Web 2.0과 롱테일 경제 - Web 3.0의 도래 예고

기술적 측면에서는 정보의 상호 교환이 가능한 Web 2.0 기반의 확대로 개별 고객들이 중시되는 롱테일(Long Tail) 경제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Web 2.0이란 정보를 일방적으로 제공받는 것이 아니라 정보의 제공자와 수혜자 사이의 상호 교류가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Web의 형태를 지칭한다.

최근 광고, 금융 등의 분야에서 Web 2.0 기반 홈페이지가 새로운 마케팅 전략으로 적극 활용됨에 따라 개인 간 의사소통 도구였던 블로그가 기업 경영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미 총자산액 4위인 웰스 파코(Wellsfargo) 은행은 자사 홈페이지에 생활관련 토론장을 만들어 고객을 유치하고 있고, 프라스퍼 마켓플레이스(Prosper Marketplace) 회사는 옥션 사이트를 통해 한 사람의 차입자가 복수의 대출자에게 융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또한 시장 구조에 있어, Web 2.0의 등장으로 대량 생산 및 소비(Mass Economy) 시장이 약화되는 한편, 다양하지만 규모가 작았던 시장 즉, 롱테일(Long Tail) 시장이¹⁷⁾ 매력적으로 등장하고 소비자가 생산에 참여하는 구조로 바뀌게 되었다. 예를 들면, 인터넷 서점 아마존의 10만 위 이하 품목의 판매 비중은 40% 정도이며, 인터

16) Information Provider. 정보를 수집·가공하여 통신망을 통해 고객에게 전달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17) Long Tail 현상이란, 수요 곡선의 꼬리 부분을 이루고 있는 틈새 상품들이 머리 부분인 히트 상품과 더불어 시장을 주도하는 것을 지칭한다. 다시 말하자면, 전체 상품의 20%가 전체 매출액의 80%를 차지한다는 파레토의 법칙이 붕괴되는 반면, 하위 80%의 상품이 상위 20%의 상품 매출에 버금가는 현상을 의미한다.

넷 음악 스토어 iTunes도 하위 80%의 매출 비중이 전체의 50%에 육박하고 있다.

결국, Web 2.0은 공급자와 소비자와의 정보격차를 현저히 축소시킴으로써 가격 결정이나 가치 창출 구조의 변화를 가져온다. 기업들에게는 소비자 개개인의 니즈에 정확히 부응하는 상품, 서비스, 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하는 거대한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또한 ‘오픈 마켓’ 등 소비자가 직접 생산·유통 단계에 참여하는 시장 구조가 확산되고 있다.

향후 5~10년 후에는 정보의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Web 2.0의 한계를¹⁸⁾ 뛰어 넘기 위해 동영상 이용, 보다 객관적인 사실 전달이 가능한 Web 3.0이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동영상 위주로 키보드와 같은 IT 장벽이 해소된다면 노년층의 사회 참여 또한 보다 활발해질 것이다.

국제 금융의 불균형 심화 - 중국의 외환보유고 1조 달러 시대의 영향

금융적 측면에서는 국제금융시장의 불균형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중국의 외환보유고가 1조 달러를 돌파하면서 2007년에는 달러 및 유가 상승에 미치는 중국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¹⁹⁾

중국의 외환보유고 급증 원인으로서는 거대한 무역수지 흑자와 외자 유입, 외환당국의 외환시장 개입 등을 들 수 있다. 중국은 2006년 9월 현재 1,097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연말까지 총 2,000억 달러를 상회할 전망이다. 대중(對中) 해외직접투자 또한 2004년 606억 달러에서 2005년에는 724억 달러로 증가하는 등 달러 유입이 지속되고 있다. 더욱이 중국 외환당국은 급격한 위안화 절상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하고 있는데, 이 또한 중국의 외환보유고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은 2006년 9월 말 현재 전 세계 외환보유고의 20.5%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2005년 9월 대비 28.5%나 증가한 수준이다. 이러한 중국의 외환보유고 증가는 대

18) 현재 Web 2.0의 커뮤니케이션 툴은 검색 기능을 활용하거나 문자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하고자 할 경우, 키보드를 통해 문자 콘텐츠를 이용해야 하므로, 정보의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편집자의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크다.

19) ‘외환보유고 1조 달러 목전, 쌓이는 달러, 증가하는 불씨’ FujiSankei Business I. (2006.10.17.)를 참고.

내외적으로 경제 환경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국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첫째 외환보유고 증가와 더불어 중국의 빠른 경제성장은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둘째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될 경우 중국 정부는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며, 이로 인해 금리 차익을 노리는 투기자금의 유입이 증가될 것이다. 셋째 외환보유고의 급증은 자본유입 증가를 나타내는 징후로 해석될 수 있어 향후 위안화의 평가 절상을 기대한 소위 핫머니라 불리는 투기성단기자본 유입 가능성이 높아진다.

해외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첫째 국제상품시장의 변동성 확대를 들 수 있다. 중국이 6개월 사용할 전략적 비축유를 구매할 경우 글로벌 원유 수요는 3배로 급증할 것이다. 또한 외환보유고의 5%(전 세계 1년 금 생산량 전체에 해당)만 금으로 대체한다고 하더라도 금 가격이 급등하는 등 국제상품시장이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²⁰⁾ 둘째 세계 금융시장에서의 주도권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중국이 달러자산을 매각하고 유로를 구입한다거나 외환보유 포트폴리오구성을 변경할 경우, 달러 가치 급락 등 국제금융시장의 혼란이 예상된다.

포스트 BRICs 부상 - TVT, E7의 급속한 발전

지역적 측면에서는 TVT(터키, 베트남, 태국), E7(BRICs, 인도네시아, 멕시코, 터키) 등 포스트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가 급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국가는 최근 급속한 경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을 뿐 아니라, 젊은 노동력을 기초로 향후에도 고성장이 전망된다.

TVT와 E7의 성장 원인을 보면, TVT²¹⁾는 뛰어난 입지 조건을 바탕으로, E7은 풍부한 노동력을 배경으로 높은 경제 성장을 달성하고 있다.²²⁾ TVT(터키, 베트남,

20) 이데일리 신문(2006. 11. 7.), '차이나 달러 시대'를 참조.

21) TVT는 타이, 베트남, 터키의 신흥 3개국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오마에켄이치(大前研一)가 BRICs에 이어 주목해야 할 신흥국으로 제시하였다.

22) 일본 주간 동양경제(2005.12.31. ~ 2006.1.7.) 를 참조.

태국)는 중국, 인도, EU 등 거대 소비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지리적 위치에 있다. 2005년 7.4%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터키는 중동과 중앙아시아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 EU 국가들이 생산기지로 활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베트남은 외국 기업들이 해외 생산 근거지를 중국 이외로 넓히기 위해 차이나+1로 활용하고 있다. 태국은 중국 및 인도와의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지리적 우위성을 경제 성장에 활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8년에는 터키 5.0%, 베트남 7.6%, 태국 4.3%로 TVT 국가들의 경제성장률은 5% 전후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²³⁾

E7은 풍부한 젊은 노동력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유럽의 OECD 가맹국들의 대부분이 인구 구조가 고령화되는 것과는 달리 브라질, 멕시코, 인도네시아 등 신흥국들은 젊은 노동력이 넘쳐 나고 있다. 이를 기초로 2050년에는 E7 국가들이 G7 국가들을²⁴⁾ 제치고 새로운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²⁵⁾ 2005년 E7 경제 규모는 환율을 고려했을 때 G7의 1/5 수준이며, 구매력을 고려했을 때는 동 3/4 수준에 머물렀으나 2050년에는 G7 경제 규모보다도 각각 25%, 75% 정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1세기 아시아의 황금 거위 - 아시아 성장에 따른 교육 수요 급증

사회적 측면에서는 아시아 교육 시장이 21세기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교육에 대한 관심이 남다른 아시아 신흥국들은 급성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교육 투자를 증대할 것이기 때문이다.

소득 증가에 따라 선진국의 GDP 대비 교육 비중이 증가한 것처럼 아시아의 경제 성장은 각국의 교육 수요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들은 1인당 GDP가 증가함에 따라 교육비 지출 비중이 증가하였으며, 한국은 특유의 높은 교육열 때문에 교육비 지출 비중이 급증하였다. 미국은 2004년 1인당 GDP가 39,722

23) 일본 국제금융정보센터 보고서 '2006~2008년의 세계 경제 전망(2006.9)' 을 참조.

24) 프랑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의 7개국을 말한다.

25) PricewaterhouseCoopers 보고서 'The World in 2050(2006.3)' 을 정리.

달러이고 GDP에서 차지하는 교육비 지출 비중은 5.9%로 1995년보다 0.9%p 증가하였다. 영국은 2004년 1인당 GDP가 35,859 달러로 1995년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함에 따라, GDP에서 차지하는 실질 교육비 지출액이 약 2배로 증가하였다. 한국은 1995년에서 2004년 사이 GDP가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지만 GDP에서 차지하는 교육비 지출 비중은 2000년 3.4%에서 2004년 4.6%로 크게 증가하였다.

경제 성장이 두드러지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유교의 영향을 받아 교육열이 높고²⁶⁾ 교육을 통한 인적 자본 육성을 성장의 근원으로 삼고 있어 향후 중국을 중심으로 아시아 교육 시장이 확대될 전망이다. 중국은 2004년 1인당 GDP가 1,480 달러로 교육비 지출 비중이 GDP의 2% 대이나, GDP의 증가와 함께 교육비 지출 또한 급증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도도 2004년 1인당 GDP가 2000년에 비해 약 1.4배 증가하였는데, GDP에서 차지하는 교육비 지출 비중이 3% 대에 불과해 교육비 지출 증가 가능성이 크다. 이외에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의 아시아 국가들은 2000년 이후 5% 전후의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지만 교육 비중은 선진국에 비해 낮아 향후 교육 시장의 성장이 기대된다.

한편,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는 교육에 대한 열의에 비해 교육 시스템이 취약해, 세계 교육 기관의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미국 스탠퍼드대 등 100여 개 서방 교육 기관이 중국에 진출한 상황이고 증가세는 지속되고 있다.

중국 문화 제국주의 부활 - 중국의 문화 수출 급증

문화적 측면에서는 중국의 문화제국주의가 부활하고 있다. 중국은 영상물을 중심으로 새로운 매체를 개발하여 문화 산업에서 급속히 성장하며 미국, 유럽 등 다양한 지역으로 문화 상품 수출을 증가시키고 있다.

26) 파이낸셜 타임스(2006. 10. 17)는 OECD의 『Education at a Glance 2006』의 교육지표를 인용, 아시아 국가들의 교육 성공 요인은 교육 제도 자체가 우수해서라기보다 특유의 민족성이 저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UNESCO(2005)²⁷⁾는 문화산업을 크게 ‘핵심문화상품(core cultural goods)’, ‘핵심문화서비스(core cultural services)’, ‘문화관련 상품(related cultural goods)’ 그리고 ‘문화관련 서비스(related cultural services)’로 분류하고 있다.²⁸⁾

중국은 전 세계 핵심문화상품 수출액 중에서 영국(85억 달러)과 미국(76억 달러)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52억 달러 상당의 문화 상품을 수출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과시하고 있다.²⁹⁾ 더욱이 중국의 문화 수출은 중화 문화권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닌 전 세계의 다양한 문화권에서 시장을 개척함으로써 가능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중국의 수출을 지역별로 보면, 미국은 중국의 핵심 문화 상품의 최대 수출 시장으로 2003년 기준 중국 핵심문화상품 수출의 34.7%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럽은 25.6%이다.

특히, 중국은 전통적인 인쇄 매체가 아닌 영상물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세계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최근 ‘비디오 게임 관련 상품’은 영상물이 88%의 비중을 차지하면서 주력 상품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2002년에는 23억 달러를 수출하여 12억 달러를 수출한 일본을 크게 앞지르고 있다. 이처럼 중국은 문화자본주의 시대라고 할 수 있는 21세기에 문화 산업에서 선진국으로 성장하기 위해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

정부와 기업의 대응 방안

이러한 2007년의 세계 트렌드에 대응해 정부와 기업은 부정적 영향을 극복하는 한편,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우선, 정부는 미국 정책 기조 변화로 인한 통상 여건 악화에 대비하고 기후 변동에 맞는 친환경 산업 구조 구축, Web 2.0 비즈니스를 위한 상거래 제도 보완, 외환시장의 불안정에 대한

27) 『International Flows of Selected Cultural Goods and Services, 1994–2003』 UNESCO, 2005를 참조.

28) ‘핵심문화상품’에는 골동품(heritage goods), 책(books), 신문과 정기간행물(newspapers and periodicals), 그 밖의 출판물(other printed materials), 음반(recorded media), 예술품(visual arts) 그리고 영상물(audiovisual media)이 속해 있다.

29) UNCTAD(2004, 2005)는 ‘핵심문화상품’의 수출, 수입액을 각각 약 547억 달러와 637억 달러로 추정하고 있다.

한·중·일 공조 체제 강화, 문화 자본주의 시대에 부응하는 문화 육성 정책 수립 등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첫째 자동차와 같이 미국 내에서도 노조의 영향력이 강한 산업 부문에서 시장개방 압력이 높아질 것에 대비하여 수출국 다변화 추진 등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정부는 기후 변동에 맞는 친환경 경제 구조를 구축하고 저탄소 연료 사용 기술 개발 등 에너지 효율의 개선 및 수요 변화를 지원해야 한다. 셋째 정부는 e-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각종 규제 완화와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각종 정책 등 다양한 형태의 사이버 범죄에 대한 예방책 마련이 필요하다. 넷째 선진화된 외국 교육 기관에 의해 시장이 잠식되지 않도록 공교육 강화, 대학교육의 경쟁력 향상 등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설 필요가 있다. 다섯째 정부는 전통적인 문화 산업뿐 아니라 새로운 분야에서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를 발전시킬 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실천에 옮길 개인과 기관에 대한 지원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

기업은 新사업 구축, 新마케팅 전략 수립, 금융 부문 리스크 관리, 기후 변동 위험 대응, 新시장 개척 등의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첫째 Megamerger, 아시아 교육 시장의 거대화, 문화 시장 성장 등에 대응하여 新사업 구축에 힘을 써야 할 것이다. 둘째 Web 2.0 시대에 진입함에 따라 소비자들의 욕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Web 기반 마케팅 전략 등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중국의 국제 금융 시장 위협에 대비해 환위험 등을 회피할 능력을 키워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기후 변동으로 인한 경영 불안을 완화시키기 위해 기후 변동 예측 능력도 키워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포스트 BRICs 시장의 발달에 대비하여 중국 일변도의 해외 투자가 아닌 새로운 시장 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저성장의 未脫出이 예상되는 국내 경제 - 2007년 국내 경제 전망

대내외 여건 변화 등을 토대로 해 볼 때, 2007년 국내 경제는 내수와 수출이 동반 부진할 것이 예상되어 경기가 재침체 국면에 빠지고, 금융 시장의 변동성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산업별로는 경기 차가 뚜렷할 것으로 보이며 남북 경협은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 내외수 동반 부진과 경기 재침체

한국 경제의 2007년 성장률은 내수와 수출 경기의 동반 부진으로 2006년의 5% 내외보다 낮은 4.2%로 전망된다. 2007년 상반기까지는 경기 하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하반기의 경기 방향성에 따라 U자형과 L자형의 시나리오가 예상되고 있다. 두 가지 시나리오 중 전년 같은 기간의 경기 상태에 따라 현재 경기가 영향을 받는 기저 효과(Base Effect)를 감안할 때 대내외적인 경제 충격이 없다면, 하반기 경기가 상반기보다 미약하게나마 호전되는 U자형 경기 추세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연간 경제성장률은 4%대 초반이 예상된다. 그러나 세계 경기, 국제 유가, 환율 변동, 북핵 등의 대외 여건이 급속하게 악화되거나, 정부의 경기 대응이 미흡할 경우에 L자형 경기 추세를 보여 성장률은 3% 대까지도 하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내수 부진 지속 : 2007년 민간소비 증가율은 자산 및 근로 소득이 감소하고, 생활 물가의 상승에 따르는 실질 구매력 저하로 2006년 4% 내외에서 3% 대로 낮아질 전망이다. 먼저 강력한 규제 정책에 따르는 부동산 시장의 위축이 지속되고, 경기 침체로 낮은 금리 상태가 유지될 것으로 보여 자산 소득 효과가 미미할 전망이다. 근로 소득의 경우에도 내외수 동반 부진으로 기업 투자 증가세가 둔화됨에 따라, 신규 고용 창출 정도가 미약해져 소득 확충이 어려워 보인다. 더구나 가계 부채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소비 여력이 크게 축소될 전망이다. 2006년 9월말 현재 가계 신용 잔액은 558.8조 원에 달하고 있으며, 가구당 부채는 사상 최대인 3,476만

원을 기록하였다. 환율 하락에 따르는 구매력 상승효과보다, 물가 상승으로 인한 실질 구매력 감소 효과가 커짐에 따라 민간 소비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설비투자는 출자총액제한제나 수도권 규제와 같은 투자 관련 제도의 개선이 미흡하고 정치 사회 불안, 내외수 경기 동반 부진 등으로 투자 심리 악화가 예상되어 5%에 미치지 못하는 증가율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건설투자는 공공 부문의 투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민간 부문에서 부동산 경기가 부진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 내외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이다. 우선 정부의 부동산 투기 억제책의 영향으로 민간 주택 분양 시장의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부가 추진 중인 행정복합도시, 기업·혁신도시, 뉴타운 건설 공공 투자 효과가 2007년 하반기부터는 점차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연간 건설투자 증가율은 2006년의 감소세에 따르는 기술적 반등 효과에도 힘입어 증가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 시장 불안 지속 : 고용 시장은 정부의 공공 부문 일자리 확대 정책에도 불구하고, 국내 경기 하강의 영향에 따르는 고용 창출력 약화로 매우 부진한 모습을 보일 전망이다. 이에 따라 2007년에도 경기 침체를 우려한 정부의 공공 부문 일자리 확대 정책은 지속될 것이 예상된다. 그러나 투자 부진과 경제 둔화에 의한 고용 축소로 민간 부문의 신규 취업 시장이 활성화되기 어려워 전반적인 고용 시장은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분야별로는 특히 제조업 부문의 취업자 감소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그동안 고용 시장의 주된 수요 산업이었던 서비스 산업도 경기 하강의 영향으로 고용 흡수력이 크게 약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물가 상승 압력 증대 : 국내 경기 부진에도 불구하고 유가 상승에 의한 수입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어 국내 물가 상승 압력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원화 기준 수입 물가 상승률은 국제 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2006년 두 자릿수의 높은 상승률을 유지하였으며, 이러한 수입 물가 급등 현상은 2007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

만 국내 경기 부진에 따르는 수요측 물가 상승 압력 완화, 원화 환율 하락에 따르는 물가 하락 효과 등이 공급측 물가 상승 압력을 다소 완화시켜 줄 전망이다.

10년 만의 경상수지 적자 반전 : 그동안 국내 성장을 견인했던 대외 부문의 경우 2007년에는 수출 경기 하강, 원유 수입 증가, 서비스수지 적자폭 확대로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경상수지 적자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먼저 수출 경기는 주요 수출 대상국인 미국과 중국의 경기 둔화, 통상 마찰 확대 등으로 하강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반면 수입 증가율은 국내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원유 가격의 상승으로 완만한 증가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부문별로는 소비재와 자본재 수입의 경우는 소비 및 투자 등 내수 부진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전체 수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원자재의 경우 국제 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여전히 높은 수입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행, 교육과 같은 서비스업의 경쟁력 약화로 만성적인 적자 상태에 있는 국내 서비스수지는 2007년에도 적자를 유지할 전망이다. 특히 원화 환율의 절상 추세가 이어지면, 국내 소비자들의 해외 소비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따라서 경상수지는 무역수지 감소, 서비스수지 적자 확대 등으로 외환위기 이후 만 10년여 만에 적자로 반전될 가능성이 높다.

○ 금융 시장 변동성 증대

실물 경기의 부진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국내 금융 시장은 각 시장의 수급 여건 변화에 따라 실물 경기와 궤를 달리 하는 양상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주식 시장 상승세 유지 : 2007년 주식 시장은 금리 하락, 적립식 펀드 수요 증대 등 대세 요인들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나, 국내 경기 침체와 복핵 문제 등으로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악화될 가능성도 상존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7년에는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 중단, 국내 경기 침체 등으로 금리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저성장기에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주식형 펀드로의 자금 유입이 증

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경기침체에 따르는 기업 실적 악화, 가계 소득 정체 등으로 자본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이 제약을 받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특히 북핵 위기가 고조될 경우에 외국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자본 시장으로부터 급속한 자금이 이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원/달러 환율 급등락 요인 병존 : 한편 원/달러 환율은 급등락 요인이 병존할 것으로 예상되어, 그 방향성이 매우 불확실한 실정이다. 2007년에는 미국의 경상 수지 적자에 의해 글로벌 달러화가 유지되어 중국 위안화와 일본 엔화에 대한 절상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원화에 대한 절상 압력을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국제 투자 은행들이 전망하는 엔화 절상 추세에 따라 원화도 절상된다면 2007년에 원/달러 환율은 800원 대까지도 내려갈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국내 경기가 둔화되고 경상수지 적자 폭이 커지며, 북핵에 의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증대하는 것과 같은 환율 급등 요인도 병존하고 있어, 이와 같은 요인들이 더욱 우세할 경우에 원화 환율은 오히려 상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원/엔 환율은 반등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어 일본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큰 폭의 경상 수지 흑자도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여 2007년에는 엔/달러 절상폭이 원/달러보다는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경기 침체에 따르는 금리 하락 : 국내 금리는 세계 경제 성장 둔화에 따라 수출이 부진해지고, 소비 및 투자가 정체되어 내수 경기가 하강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올해보다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 악화와 내수 부진이 이어질 경우, 부동산 가격의 상승 압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이 정책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주요 해외 투자은행들에 따르면 미국 경제의 침체 예상에 따라 2007년에는 미국 연방은행이 연방기금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는 점도 국내 금리 인상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 2007년 주요 거시 경제 지표 전망 >

		2005(P)	2006(E)	2007(E)		
국제 지표 (IMF)	세계경제성장률 (%)	4.7	5.1	4.9		
	미국 (중국)	3.2 (10.2)	3.4 (10.0)	2.9 (10.0)		
	일본 (EU)	2.6 (1.3)	2.7 (2.4)	2.1 (2.0)		
국내 지표	국민 계정	경제성장률 (%)	4.0	4.8	4.2	
		최종소비지출 (%)	3.4	4.2	3.7	
		민간소비 (%)	3.2	4.1	3.5	
		총고정자본형성 (%)	2.3	2.9	2.5	
		건설투자 (%)	0.4	0.5	1.5	
		설비투자 (%)	5.1	7.5	4.5	
	대외 거래	통 관 기 준	경상수지 (억 \$)	166	30	-30
			무역수지 (억 \$)	232	170	100
		수출 (억 \$)	2,844	3,250	3,550	
			증가율 (%)	(12.0)	(14.3)	(9.2)
			수입 (억 \$)	2,612	3,080	3,450
			증가율 (%)	(16.4)	(17.9)	(12.0)
	기 타	소비자물가 (평균, %)	2.7	2.5	2.8	
		실업률 (%)	3.7	3.5	3.7	
	금 융	원/\$ 환율 (평균, 원)	1,024	955	925	
		국고채금리 (평균, %)	4.3	4.6	4.4	

○ 산업별 경기 명암 교차

2007년 산업별 경기를 살펴보면 반도체, 조선 산업은 호황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되며, 자동차, IT, 기계, 물류, 해운 산업은 2006년 수준 정도의 산업 경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건설 산업은 수년간 지속된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할 전망이다.

(경기 호황 업종)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호황 : 2006년 국내 반도체 산업은 호황을 기록하였다. 우선 디램(DRAM)³⁰⁾ 부문의 경우 전방 주력 산업인 PC 산업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제품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독일, 대만 등의 경쟁국 업체들이 생산 공정 방식을 전환하는 과정에 차질이 발생하여 세계 시장에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한편 플래쉬 메모리(Flash Memory)³¹⁾ 부문은 디지털 제품 시장의 고성장에 따르는 수요 확대로 생산량이 급증하였다.

2007년에도 디램 반도체 부문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새로운 컴퓨터 운용 체제인 '윈도우 비스타' 출시로 인한 PC 수요 증가로 호황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적인 반도체 시장 조사 회사인 가트너(Gartner)에 따르면 세계 디램 수요 대비 공급량이 2007년 1/4분기에 100.1%에서 4/4분기에는 96%까지 하락함에 따라, 공급 부족에 의한 가격 상승으로 디램 부문의 호황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플래쉬 메모리 부문도 세계 시장에서의 디지털 제품 수요 확대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생산량 증가세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30) DRAM은 정보기억 장치이며 전원이 꺼지면 정보기억이 사라지는 특징을 갖고 있다.

31) 플래쉬 메모리는 전원이 꺼져도 정보기억이 사라지지 않는 특징을 갖는 장치이다.

이에 따라 국내 주력 반도체 생산 업체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경우 메모리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선도하면서 국내 반도체 산업 경기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는 세계 최초로 16단 MCP (Multi Chip Package)³²⁾, 16Gb(기가비트) 낸드 플래시³³⁾ 등을 연속 개발하는 등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이닉스도 고부가가치 제품인 스페셜 디램이 전체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면서 수익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조선, BRICs 수요 확대로 호조 지속 : 2006년 조선 업계는 건조량(43.0%), 수주량(50.0%), 수주 잔량(38.6%) 등 3개 지표에서 경쟁국들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면서 세계 1위를 기록하였다. 이에 따라 수출 규모는 예상보다 약 10% 가량 증가하여 사상 최대치인 220억 달러 이상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조선 산업의 호황은 고유가 지속에 따르는 원거리 원유·정유 수송 수요 확대, 대체 에너지원인 LNG (Liquefied Natural Gas, 액화천연가스) 운송 수요 급증, 심해 유전 개발을 위한 해양 플랜트³⁴⁾ 수주 증가 등에 그 원인이 있다.

2007년에도 조선 산업의 시장 상황을 결정짓는 주된 변수는 국제 유가의 방향성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 유가는 석유 시장의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상승세가 예상된다. 그러나 수주 부문은 2006년에 매우 높은 수준의 증가율을 기록함에 따라, 국내 수주 물량이 조선 산업의 건조 능력에 비해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감소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수주 행태는 LNG선과 같은 고부가가치선 위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32) 1개의 패키지 안에 16개의 메모리를 적층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여 소형화와 대용량화를 동시에 실현함으로써 플래시 메모리의 주 사용처인 휴대폰 등 모바일 디지털 기기의 소형화, 다기능화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33) 낸드플래시는 Flash Memory의 일종으로 전원이 꺼져도 기억이 남아 있으며 내부의 셀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

34) 해양 플랜트란 원유의 시추, 정제와 운송까지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특히 중장기적으로 보아도 조선 산업의 호황이 수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FTA와 같은 무역 자유화가 더욱 확대될 것이고, BRICs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의 빠른 성장으로 세계 해상 물동량 증가세가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중국이 최근에 들어 조선소를 대규모로 증설하고 있어, 2008년 이후에는 세계적인 공급 과잉 문제에 직면할 우려가 높다. 한편 조선 산업의 새로운 고부가가치 제품으로는 가스 하이드레이트(Gas Hydrate) 운반선³⁵⁾, 청정선³⁶⁾ 등과 같은 신개념 화물선, 선박 기술과 문화 산업이 융합된 초호화 여객선 등이 부상할 전망이다.

(경기 유지 업종)

자동차, 고유가에 따르는 내외수 판매 동반 부진 : 2006년 국내 자동차 산업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내수 판매가 증가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국제 유가 상승, 내수 침체 지속, 현대차의 파업 장기화 등으로 내수와 수출이 모두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반면 수입차의 경우 해외 업체들의 적극적인 한국 시장 공략, 원화 환율 하락 등으로 시장 점유율이 크게 확대되었다.

2007년에도 자동차 산업은 내수와 수출 경기 모두 부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 이유는 국제 유가가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높고, 내수 경기가 더욱 침체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수출 부문의 경우 주요 수출 대상국중 하나인 미국 경제가 소비 부문을 중심으로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어, 소폭 증가하는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그러나 수입차의 경우 국내 고소득 계층 위주의 시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 경기 하강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여, 자동차 수입 증가율은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35) 낮은 온도와 압력에서 가스와 물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고체 형태의 연료 가스 하이드레이트를 운반하는 선박을 의미한다.

36) 환경오염의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 할 수 있는 선박을 청정선이라고 부른다.

IT, 미국 경기 하강으로 성장세 둔화 : 2006년 국내 IT 산업은 무선통신기기, PC, PDP (Plasma Display Panel, 플라즈마 표시 패널) 등을 중심으로 호황을 누렸다. 특히 이동통신기기 부문의 호황은 이동통신사들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 허용으로 소비자들의 휴대폰 전환 수요의 급증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IT 산업의 추세는 2007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나, 경기 하락에 의한 내수 부진이 악재로 작용하여 성장세는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경기의 둔화가 IT 산업 수출 증가율을 둔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무선통신기기 부문은 지상파 디엠비 (DMB, 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³⁷⁾ 서비스 지역 확대, 와이브로 (WiBro, Wireless Broadband Internet, 무선광대역인터넷)³⁸⁾ 보급, 고속 하향 패킷 접속³⁹⁾ 등 신규 서비스 실시에 따르는 시장 초기 수요 급증으로, 다른 IT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기계, 국내 설비투자 부진으로 실적 정체 : 2006년 기계 산업은 수출 부문의 경우 미국, 중국, 일본 등의 수요 확대로 수 년 만에 호황을 맞이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내 기계 산업들이 생산 제품의 핵심 부품에 대한 대외 의존도가 높아, 기계 수출이 증가할수록 수입도 늘어나는 악순환의 구조를 지속하였다.

2007년에는 내외수 동반 부진으로 2006년과 같은 호황은 기대하기 어렵다. 우선 최대 수출 대상국인 미국을 포함하여 세계 경제의 성장세가 약화될 우려가 높아,

37)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DMB)은 음성, 영상 등의 신호를 디지털방식으로 제공하여 이동 중에도 수신 가능한 방송 서비스이다.

38) WiBro는 초고속 무선 인터넷을 말하며 실외에서 이동 중에도 고속의 전송속도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39) 고속 하향 패킷 접속(HSDPA : High Speed Download Packet Access)이란 휴대폰으로 최대 10Mbps (1초당 10메가 바이트)의 속도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3.5세대 이동통신 방식이다.

수출 증가율 둔화는 불가피한 실정이다. 특히 국내 투자 관련 제도 개선 미흡, 정치 사회 불안 가속 등으로 기업들의 설비투자 침체가 예상됨에 따라, 내수 부문의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물류, 내수 감소와 고유가로 채산성 악화 : 2006년 물류 산업은 내수 부진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크게 약화되었다. 다만 국내 기업들이 유가 상승, 환율 하락 등으로 악화된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자,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는 위탁 물류를 확대함에 따라 이 부문의 시장⁴⁰⁾ 성장세는 양호한 실적을 기록하였다.

2007년에도 국내 물류 산업은 내수 부진에 따르는 물류 수요 둔화, 유가 급등으로 인한 물류비 상승 등으로 경기 하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단 기업들이 지속적인 비용 상승 압력을 상쇄시키기 위해 위탁 물류 비중을 높임으로써 제3자 물류 비중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운, 경쟁 심화로 실적 둔화 : 2006년 해운 산업은 ‘중국 효과 (China Effect)’에도 불구하고, 대형 선사들의 경쟁 심화로 경기 부진 양상을 나타내었다. 머스크 라인 (Maersk Line)⁴¹⁾의 네들로이드 (P&O Nedlloyd)⁴²⁾ 인수 등 M&A를 통한 선사들의 몸집불리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대형 선사들의 글로벌 정기선 서비스 개편, 선사간 협력 강화, 대형선 확보 등으로 시장 경쟁이 심화되었다. 이는 중국 경제의 고성장으로 물동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중국 효과’가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운임이 하락하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40) 위탁물류시장은 제3자 물류시장이라고도 하며 외부의 전문 물류 업체에게 일정 기간 계약을 통해 물류 업무를 아웃소싱 하는 경우를 말한다.

41) 덴마크 코펜하겐에 본사를 두고 있는 세계 최대 선사인 머스크 시랜드가 세계 3위 선사인 P&O 네들로이드를 인수하여 세계 최대의 선사로 다시 태어나 머스크 라인(Maersk Line)이라 명명(命名)하였다.

42)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두었던 세계 3위 해운 업체이다.

2007년 국내 해운 산업은 북태평양 항로의 중심축인 중국 경제가 다소 성장률이 둔화되기는 하겠지만 여전히 고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보여, 이에 따르는 중국 효과가 지속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다만 또 다른 중심축인 미국 경제가 주택 경기를 중심으로 경제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여전히 대형 선사들 간 시장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여, 산업 경기는 전반적으로 크게 개선될 여지가 없어 보인다.

(경기 부진 업종)

건설, 경기 부진 지속 : 2006년 건설 산업은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의 영향으로 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경기 침체가 지속되었다. 한편 정부 재정 지출 중 SOC (Social Overhead Capital, 사회간접자본) 투자 비중이 크게 하락하고, 하반기 중 계획되었던 종합투자계획이 민간 자본 참여의 부진으로 일정에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공공 부문이 민간 부문의 부진을 보완해 주지 못하였다.

2007년에도 민간 부문은 강북뉴타운 사업의 본격적인 진행 등 호재는 있으나,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의 영향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 공공 부문의 경우, 공영 개발 방식의 임대 주택 사업 추진, BTL 사업(임대형 민자 사업)의 본격화 등의 긍정적 요인이 존재한다. 그러나 정부가 계획 중인 사업들은 대부분 민간 자본 참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2006년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고수익이 기대되지 않는 상황에서 민간자본의 적극적 참여가 가능할 지는 의문이다.

< 2007년 주요 산업 경기 전망 개요 >

		내 수	수 출	생 산	비 고
호황 업종	반도체				·DRAM 공급 부족 지속
		3.4→5.5	18.3→17.5	6.5→10.7	·플래쉬 메모리 수요 확대
	조선				·유조선, LNG선 등 호조세 지속
		33.7→-18.8	27.7→13.7	17.5→16.7	
유지 업종	자동차				·고유가 지속
		4.5→3.1	3.7→2.7	5.7→2.8	·국내 및 세계 경기 둔화
	IT				·디지털, 무선통신기기 수출 호조
		9.6→4.9	6.2→5.7	8.5→3.3	·세계 경기 둔화
	기계				·국내 설비투자 부진
		3.2→2.6	14.4→4.5	5.2→4.8	·세계 경기 둔화
	물류		-	-	·내수 부진
		4.1→3.8	-	-	·제3자 물류 증가
	해운				·세계 경기 둔화
		-29.3→-15.0	-18.9→-10.0	3.0→-5.0	·고유가 등 비용 상승
부진 업종	건설				·민간 건축 수주 감소세 지속
		-7.1→-0.4			·건설 경기 부진 지속

- 주 : 1) 좌우 수치는 각각 2006년 추정치 및 2007년 전망치이며, 자동차의 수출 및 생산은 KD (현지 생산 수출) 제외함
 2) 조선의 내수는 수주 기준이며, 해운의 경우는 특성상 내수는 컨테이너선 시황, 수출은 건화물선 시황을, 생산은 유조선 시황을 적용함
 3) ☀는 증가율 10% 이상, ☁☀는 5~10%, ☁는 5% 미만의 증가율을 의미함.

○ 남북 경협 위축

북핵 사태에도 불구하고, 경협 확대 지속 : 2006년 남북 경협은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사업을 비롯한 상업적 거래와 민간의 대북 지원 급증 등으로 지난해에 이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였다.

10월말 현재, 남북 교역과 경협 사업은 전년 동기의 8억 7,560만 달러에 비해 약 33.5%나 늘어난 11억 6,930만 달러를 기록함으로써 지난해에 이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상업적 거래는 금강산 관광사업이 핵·미사일 발사 사태로 약 32.0%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사업과 일반 교역 및 위탁가공 교역 등에 힘입어 35.2%나 증가하였다. 특히 개성공단의 경우, 부지 공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반출은 소폭 증가한 반면, 시범단지 15개 업체와 본단지 3개 공장이 가동됨에 따라 생산된 제품의 반입은 전년 동기 대비 467%나 급증하였다. 이로써 상업적 거래에서 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2.7% 증가에 그친 반면, 반입은 60.7%나 늘어났다. 한편 일반 교역액은 전년 동기에 비해 50.6% 늘어난 반면, 전체 교역업체 수와 품목 수는 오히려 각각 7.4%와 3.1% 감소함으로써 업체당 및 품목당 거래 단위가 확대되는 바람직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지원성의 비상업적 거래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과 특정 품목에 편중된 교역 구조, 남북 경협이 경제 외적 불안 요인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 점 등은 아직까지 경협의 안정성과 제도화가 미흡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비상업적 거래는 8월말까지는 핵·미사일 사태로 정부의 대북 쌀·비료 지원이 유보됨으로써 전년 동기 대비 27.6% 감소하였다. 그러나 9월 한달 동안에만 민간의 대북 수해 복구 지원이 2억 1,600 달러나 이루어짐으로써 1~10월말까지의 대북 지원은 30.1%의 증가세로 급반전되었다. 이로써 비상업적 거래가 전체 남북 경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4.8%로 늘어났다. 또한 농림수산물과 광산물의 1차 상품을 비롯하여, 석유류와 대북 지원 비료 중심의 화학공업 제품, 개성공단 공장 건설을 위한

철강 금속제품 등의 5개 부문이 전체 교역의 81.5%를 차지함으로써 특정 상품에 편중된 교역 구조를 갖고 있다. 이외에도 북한의 개성관광 사업 지연과 사업자 변경 요구, 금강산 내의 이산가족 면회소 건설 공사의 일방적 중단 등은 남북 경협 의 시급한 해결 과제로 지적된다.

< 거래 유형별 남북 교역 추이 >

(단위 : 100만 달러)

	상업적 거래				비상업적 거래	합계
	일반교역	위탁교역	경제협력	소계		
1995	230.4	45.9	0	276.3	11.0	287.3
2000	110.5	129.2	33.6	273.3	151.8	425.1
2001	111.4	124.9	18.9	255.2	147.8	403.0
2002	171.8	171.2	25.0	367.9	273.8	641.7
2003	223.7	185.0	21.0	429.7	294.4	724.2
2004	171.8	176.0	88.7	436.5	260.5	697.0
2005.	209.8	209.7	270.0	689.5	366.2	1,055.8
2006.1~10	248.6	212.9	300.6	762.0	407.3	1,169.3
(증가율)	(50.6%)	(23.3%)	(33.0%)	(35.2%)	(30.5%)	(33.5%)

주 : 1) 상업적 거래의 경제협력은 개성공단사업, 금강산 관광사업, 기타 경협사업을 의미하고, 비상업적 거래는 정부민간 지원과 사회·문화 협력사업, 경수로 건설과 KEDO 중유 제공 등을 포함함

2) () 내의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임.

개성공단 사업을 제외한 금강산 관광사업과 남북간 육로 연결 사업은 부진하였다. 금강산 관광사업은 내금강 관광 및 골프장 개장 지연, 그리고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이후 대북 관광 사업에 대한 부정적 국내 여론 확산 등으로 관광객이 감소하였다. 이로 인해 2006년 11월말 현재 금강산 관광객은 약 23만 명으로, 당초의 2006년 목표치의 40만 명은 물론, 전년 동기의 28.8만 명에 비해서도 약 20% 감소하였다.

< 연도별 금강산 관광객 추이 >

(단위 : 천 명)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06.1~11
합 계	10.5	147.5	212.0	58.8	87.4	77.7	272.8	301.8	230.2
- 내국인	10.5	147.4	211.3	58.2	86.9	77.2	270.7	300.0	228.5
- 외국인	-	0.07	0.8	0.6	0.5	0.5	2.1	1.9	1.7
누 적	10.5	158.0	370.0	428.9	516.3	594.0	866.8	1,168.6	1,398.8

개성공단 개발 사업은 시범단지 착공 3년 5개월 만인 2006년 11월 현재, 입주업체 15개 업체와 본단지 2개 공장이 가동 중에 있다. 현지에는 북측 근로자 1만 여 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1인당 생산액도 2005년 243 달러에서 2006년 10월에는 1인당 평균 임금 66.7 달러의 약 20배에 달하는 1,340 달러로 증가하였다. 이로써 2006년 1~10월의 개성공단 교역액은 전체 남북 교역 및 상업적 거래에서 각각 19.9%와 30.6%를 차지하였다. 본단지 9개 업체는 공장을 건축 중에 있으며, 1단계 100만 평의 부지 조성 공사는 2007년 상반기에 완료될 예정이다. 그러나 2006년 내에 단계적으로 분양할 예정이었던 본단지 잔여 용지 60여만 평은 북핵 사태로 인해 잠정 연기된 상태이다. 한편, 남북한 철도 연결 사업은 5월에 시험 운행을 실시하려고 하였으나, 북측의 일방적인 연기 통보로 무산된 이후,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으로 중단된 상태이다.

북핵 사태의 중장기화로 남북 경협도 차질 우려 : 2007년 남북 경협을 전망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남북 간의 경제적 요인과 함께, 남북 관계와 북핵 문제를 비롯한 경제 외적 불안 요인이다. 경제적 요인과 남북 관계 역시 북핵 문제의 진전 여부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결국 북핵 문제가 향후의 남북 경협 전망에 가장 결정적인 변수로 지적된다. 특히 개성공단과 금강산 사업

등의 민간 사업은 물론, 철도·도로 연결 사업 및 경공업 원자재 제공과 지하자원 공동 개발과 같이 정부 차원의 대규모 경협 사업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2007년 남북 경협 전망은 북핵 문제의 향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다시 말해 2007년 남북 경협은 경협 인프라 개선과 개성공단 1차 본단지 공장의 본격 가동에도 불구하고, 북핵 해결 지연과 이로 인한 남북 관계의 불안정성과 같은 경제 외적 불안 요인 등은 본격적인 경협 확대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북핵 사태 진전 여부에 따라 크게 엇갈릴 전망이다, 현재의 긴장 국면이 이어질 경우에도 2007년 남북 경협은 일정한 차질이 우려된다. 남북한 양측의 정경분리 원칙으로 핵·미사일 문제가 군사적 충돌과 같은 상황에 이르지 않는 한 민간의 교역과 개성공단 등의 기존의 경협 사업에는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남북 관계의 불안정성과 경협에 대한 미국의 투명성 제고 및 속도 조절 요구 증대, 북한 변화 유도라는 경협의 순기능 약화 등으로 당국 차원의 지원 사업과 민간의 신규 경협 사업은 지체와 서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실제로 2006년 7~9월에 예정돼 있던 총 4억 5,400만 달러 가운데 정부가 중단시킨 경협 규모는 쌀·비료 지원 2억 7,000만 달러와 철도 및 도로 자재·장비 1,200만 달러, 경공업 원자재 제공 8,000만 달러 등 약 3억 6,000만 달러에 달한다. 또한 정부는 이미 당국 차원의 남북 경협 및 지원 사업의 중단은 물론, 금강산 관광객에 대한 보조금 중단과 개성공단 2차 본단지 분양 유보를 결정하였다. 이로 인해 관련된 민간의 신규 경협 사업은 물론, 사업의 불안정성 제고 및 국민들의 불안 등으로 기존 사업의 정상적 추진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다만, 특사 파견을 통한 정상회담 개최나 북미간 양보로 6자회담에서 진전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2006년 6월의 제12차 남북경협추진위원회에서 합의한 경공업과 지하자원 개발 등의 대규모 경협 사업은 물론,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경제 지원으로 획기적인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

< 주요 현안 2 > 원/엔 환율의 향방

2006년 상반기에 들어 원/달러 환율이 세 자릿수로 급락한 데 이어, 하반기에는 원/엔 환율마저 800원대가 붕괴됨에 따라, 우리 수출품의 일본 제품에 대한 가격 경쟁력이 크게 약화되었으며, 수출입 기업들의 환 리스크도 크게 확대되었다.

원/엔 환율 하락의 원인

2006년 초 약 860원 선을 기록하였던 원/100엔 환율은 연말에는 800원 내외까지 급락하였다. 원/엔 환율 하락은 달러화에 대한 원화와 엔화의 절상 속도의 차이로 부터 유발된다. 우선 원/달러 환율은 경제 펀더멘털(Fundamental)을 반영하지 못하고 급격한 하락세를 지속하였다. 이는 원/달러 시장에 달러 유동성이 지속적으로 유입되어 달러화의 상대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하였기 때문이다. 2006년 10월까지 한국은 약 17억 달러의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자본수지는 경상수지의 약 8배에 가까운 130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다. 반면 일본은 상품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이를 초과하는 자본수지 적자로 달러화가 오히려 순수출 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2006년 1~9월의 기타수지는 약 13.3조 엔의 적자를 기록하여 같은 기간에 발생한 경상수지 흑자폭인 약 12.8조 엔을 초과하였다. 또한 일본의 아베 총리는 일본 경제의 회복세가 약화될 우려가 존재하기 때문에, 경기 회복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저금리 기조를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내어, 일본에서 자금을 빌려 외국으로 투자하는 엔캐리 자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결국 이러한 양국 외환 시장에서의 상이한 수급 요인이 원화의 절상 속도가 엔화의 절상 속도를 훨씬 넘어서는 원인이 되었다.

그러나 2007년에는 원/엔 환율 하락세가 다소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 이유는 글로벌 달러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엔화의 절상 속도가 2006년보다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예상의 가장 큰 이유는 일본 경제가 회복세를 지속할 경우, 이는 수요측 물가 상승 압력을 증대시킬 것이고, 일

본 정부도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본으로부터의 자본 유출의 규모가 감소할 것이고, 이는 결국 엔화의 절상 속도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일본 내 경제 연구 기관들은 2007년 엔/달러 환율은 평균 110엔 내외, 최저 103엔까지도 하락할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원화 환율이 크게 절상되지만 않는다면 2006년과 같은 금융 기관과 기업에 의해 유발되는 단기 차입 급증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동안의 원/엔 환율의 하락에 따르는 대일 무역 적자 증가도 자본 유입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제 금융 시장에서는 경제 펀더멘털에 근거할 때, 원화는 고평가 되어있어 투자 가치가 낮고, 엔화는 플라자 합의 이후 실질 실효 환율이 최저 수준에 있어 투자가치가 높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참고로 국제 투자 기관들의 원화 환율과 엔화 환율 전망치에 따르는 재정 환율에 근거할 경우, 2007년 원/100엔 환율은 800원대 중반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파급 영향과 대응 방안

원/엔 환율이 하락(원화 가치 상승)할 경우, 세계 시장에서 한국 제품과 일본 제품의 높은 경합성을 고려해 볼 경우, 국내 무역 수지 흑자폭 축소, 기업의 수익률 하락이 발생하게 된다. 참고로 한국의 수출 비중 상위 품목 중에서 한·일간 경합성이 높은 품목 비중은 2000년 28.8%에서 2004년 46.1% 그리고 2005년에는 50.6%로 증가하였다. 또한 원/엔 환율 변동성이 심화될 경우 한일간 높은 교역 연관성을 감안하면, 국내 수출 기업은 물론 수입기업들도 높은 환 리스크를 안게 되어, 생산, 투자 등의 기업 활동이 크게 위축될 우려마저 존재한다.

원/엔 환율 하락에 대한 방안을 외환정책과 기업정책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외환정책으로 첫째,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 등과 같은 선진국의 경우도 환안정 기금 등을 조성하여 환율안정을 유지하는 점을 감안하여, 한국도 환율 급등락을 막기 위해 구두개입과 재정을 통한 미세조정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내외 금리차는 원화 환율의 추가적인 절상요인이 되는 점을 감안하여 금융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셋째,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합리성을 유지함으로써 외환시장에서 정책당국의 신뢰성을 제고하여 정부의 환율정책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넷째, 원/엔 시장에서 원/엔의 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유동성 공급을 대행하는 기관을 지정하는 유동성 공급자 제도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한국의 간접투자 포트폴리오를 개선하여야 한다. 외국인 증권투자는 주식에 집중되어 주식 비중이 89%이며, 이에 비해, 한국의 해외간접투자는 채권에 집중되어있어 한국의 해외 주식투자의 비중은 25.7%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단기적인 외국인 투자변화에 의한 환율변동에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를 띠고 있다. 파생상품 등 해외주식투자의 비중을 높여 자본수지 흑자 기조를 완화하는 한편 환율변동을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포트폴리오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내 채권 시장을 확대 발전시켜 외국인이 국내 채권투자를 확대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여섯째, 금감원 등 금융 감독기관은 환율변동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단기채무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단기채무의 안정비율은 현재 60%이나 원화의 환율가치와 변동 위험성을 고려하여 신축적인 안정비율로 단기채무의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예를 들면 단기채무가 단기간에 급등할 경우 단기채무의 안정비율을 50%로 축소하여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일곱째, 기축통화인 달러화의 약세로 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증대될 것으로 판단되어, 이러한 시장 급변동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아시아권 국가들의 공동대응이 필요하다. ‘원·엔·위안’의 아시아 공동 통화를 도입하여 미국 달러화 중심의 결재 통화를 다변화하여 통화 가치의 안정을 도모하여야 한다.

기업정책으로는 우선 한국의 수출기업들이 R&D 투자를 통하여 고부가가치 상품의 생산증대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금융세제혜택 등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다음으로 현재 정부기관에서 중소기업에게 제공하는 환변동보험 등 환율관련 지원시스템을 확대 발전시키고, 선물시장에 대한 교육 등을 확대 제공하여 중소기업이 선물시장과 위험관리에 대한 이해를 넓히도록 해야 한다.

< 주요 현안 3 > 한국 자본 시장의 가능성

2006년 국내 주식 시장은 국내 경제 펀더멘털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강세를 보였다. 2007년에도 우리 자본 시장은 경기 둔화 전망에도 불구하고 주식 수요 여건이 개선되면서 상승세를 유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자본 시장의 5대 긍정적 환경 변화

우선 2007년 주식 시장에 예상되는 긍정적 여건으로는 첫째 저금리 기조가 지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물론 정책 당국의 부동산 시장 안정 의지가 약화되지는 않겠지만, 경기 침체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안정 정책은 통화 정책보다는 규제나 조세 정책이 주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정책 당국의 통화 정책의 목표 변수인 물가 수준도 고유가에 따르는 상승 압력이 높을 것으로 보이나, 국내 경기 둔화와 원화 강세에 따르는 하락 압력이 상당 부분 상쇄시켜 비교적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실물 경기와 부동산 경기 둔화에 따른 기업과 가계의 투자 및 주택 자금 수요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부동산 투자의 위험성이 증대되고 있다. 2006년에 들어 매우 불안한 움직임을 보였던 부동산 시장은 2007년에 들어 높은 가격과 극도의 거래 부진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부동산 투자의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2007년 국내 부동산 시장은 일부 과열 지역에서 지속적인 가격 상승 압력이 존재하기는 하겠지만, 정책 당국의 강력한 행정 규제와 조세 정책으로 하락 압력이 점차 힘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셋째 거시 경기 흐름과는 무관하게 기업 경영 지표가 호조를 보이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국내 경기가 장기 침체를 지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들의 실적은 꾸준한 구조조정 등으로 수익성이 크게 높아지고, 재무구조가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경기 상황에 따라 기업들의 매출액이 크게 변동하나, 수익성을 나타내는 매출액경상이익률은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또한 기업들의 부채비율이 100% 이하로 떨어졌으며, 자기자본 비율도 50% 이상으로 상승하고 있다.

넷째 위험 자산에 대한 개인의 인식이 변화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지배하던 국내 투자자들의 위험에 대한 인식이 빠르게 바뀌어가고 있다. 일정 손실을 감수하고라도 수익률 극대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자금을 운용하는 위험인수(risk-taking) 자금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즉, 은행 예금으로의 자금유입이 주춤하는 대신, 주식에 투자하는 간접 금융상품에 대한 자금 유입이 견조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투자신탁과 투자회사 등 간접투자기구의 비중에서 주식 시장 대기자금 성격의 MMF와 적립식펀드와 같은 주식형펀드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통하여 알 수 있다. 2007년 이후에도 부동산에 대한 안전성이 약해지면서 적립식펀드로의 지속적 자금유입 등이 예상되고 있다. 즉, 복핵 문제 등의 외부적 충격이 없다면, 국내 경기와 관계없이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에서 주식 시장으로 본격 이동될 가능성이 크다.

마지막으로 제도적인 측면으로 ‘자본 시장통합법’ 시행으로 자본 시장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2006년 정기국회에서 자본 시장관련 법률을 통합하는 자본 시장 통합법(가칭 ‘금융투자업과 자본 시장에 관한 법률’)이 통과될 경우 1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08년 중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는 자본 시장을 동북아 금융허브로 도약시키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투자은행의 육성을 위해 자본 시장 통합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증권거래법, 자산운용업법 등 자본 시장 관련 금융법을 통합하여 자본 시장 규율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편할 것이다. 앞으로 국내에서도 금융회사가 본격 투자은행업 시대가 도래되면서 주식 시장을 확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내부에 일정한 방화벽 요건만 갖춘다면, 금융투자회사가 은행·보험 상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금융업 관련 상품을 취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금융투자상품이 추상적·포괄적으로 규정됨으로써 금융투자회사가 이론상 무한대의 금융상품을 개발할 수 있게 되어 다양한 자본 시장 상품이 쏟아지면서 시중자금을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⁴³⁾

43) 현행 금융업법에는 각 금융회사가 취급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 구체적으로 열거(증권거래법 2조, 신탁업법 10조 등)돼 있어 新상품 개발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주가 '대세 상승론' 안착을 위한 정책 과제

특히 국내 자본 시장은 현재 1980년대 일본과 1990년대 미국에서 나타난 인구구조상 주가의 '대세 상승' 여건도 조성되고 있다. 1980년대 일본과 1990년대 미국 주식 시장은 저금리구조, 간접투자문화 정착, 베이비부머들의 자산증식 활동 강화 등의 요인에 의해 전례 없는 호황을 누렸다. 미국에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1945~1964년도에 출생한 베이비붐 세대가 1990년대 이후 40대로 진입하면서 소비주체로 부각되었고, 동시에 노후를 준비하는 주체가 되면서 금융자산 특히 주식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다. (1990년대의 신(新)경제 효과와 더불어 금융자산의 가치상승 현상을 유도함) 우리나라도 베이비붐 세대들이 조만간 은퇴에 직면할 시점에 있어 자본 시장 환경이 미·일의 주가의 '대세상승기'와 비슷한 경제 환경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도 미국, 일본 양국처럼 기업의 자본 이익률 급등, 저금리 구조, 제도·경제적 인프라 발달 등의 유사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경제활동인구가 정점에 달했던 시기의 주식 시장 시가 총액 규모는 자국 GDP의 1.2~1.3배에 해당되었던 점을 적용하면 KOSPI는 2012년 3,000p에 달할 수 있다. 단, 부동산의 경우 일본은 주가가 먼저 오르고 2~3년 후 부동산가격이 올랐으며, 미국의 경우 주가의 대세상승기에 부동산 가격은 비교적 안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긍정적인 주변 여건이 주식 시장의 상승으로 이어지게 하기위하여 정책 당국은 첫째, 부동산 버블의 원인을 규명하여 이에 맞는 대응책으로 부동산 버블의 확대를 차단하고 향후 부동산가격 급락 현상을 피해야 할 것이다. 둘째, 개인의 자금이 실제 주식 시장으로 유입되도록 자본 시장 통합법을 예정대로 시행하여 자본 시장을 획기적으로 개혁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과거와 같이 증시 활황기에 기업의 지나친 유상증자 등으로 주식의 초과공급 현상이 발생하여 주식 시장의 탄력성을 잃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내국인 주도로 자본 시장에 긍정적인 자금흐름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투자자 욕구에 부합하는 금융기관의 신상품 개발 능력을 제고하여야 하며, 개인의 경우 국내 자본 시장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금융자산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고 자본 시장 상품에 대한 간접투자를 증대할 필요가 있다.

□ 2007년 5대 국내 경제 현안과 과제 - 정부 정책 과제

2007년 국내 경기를 예상해 볼 때 저성장 지속과 가계 부채 위기, 외환 시장 불안과 경상수지 적자화, 부동산 버블 붕괴 우려 증대, 한반도 정세 불안으로 인한 경제 심리 악화, 대선 포퓰리즘과 정치 경제 등의 5대 국내 경제 현안이 민생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으로 우려된다.

○ 저성장 지속과 가계 부채 위기

우선 저성장이 지속됨에 따라 경제의 고용 창출력이 감소하여 청년 실업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비정규직 증가와 같은 고용 불안정성이 심화되는 고용 시장의 구조적 문제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⁴⁴⁾ 고용 시장 부진과 더불어 민생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은 9월말 기준 558.8조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계 부채 문제이다. 이는 10년 전에 비해 약 2.6배가 급증해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중에서 주택담보대출은 57.8%나 달하고 있어, 만약 부동산 경기가 급랭할 경우 가계, 기업, 금융 회사가 연쇄적으로 어려움에 빠져 서민 경제의 파탄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러한 가계 부채 급증의 원인은 저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산층이 붕괴되어 신용 불량자나 개인 파산자가 급증하는 데에 있다. 즉, 극빈층의 경우 자산 소득이나 근로 소득이 미약하여, 소비 여력 유지는 부채를 통해서만 가능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부동산 투기 열풍으로 주택 담보 대출이 크게 늘어난 것도 가계 부채가 급증하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문제는 이와 같이 막대한 가계 부채가 통화 당국의 금융 정책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만약 부동산 시장이나 물가가 불안하여 금리 인상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더라도, 금리 인상으로 가계 부채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 부진이 더욱 심화되는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44) OECD 고용 지표 작성 기준으로 한국의 고용률은 2005년 기준 63.7%로 OECD 평균인 65.5%에 크게 미치지 못하여, 30개 회원국 중 20위 수준에 그치고 있다. 더구나 국내 기준으로는 2002년 60%에서 2004년 59.8%, 그리고 2006년 1~10월중에는 59.7%로 갈수록 저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기 활성화를 통해 경제의 고용 창출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는 기업 투자 확대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특히 민간 투자를 주도하고 있는 대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 수도권 공장총량제의 완화, 공장설립시 기업이 부담하는 환경분담금 등 각종분담금의 축소 등이 요구된다. 또한 벤처 및 중소기업의 창업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 조세 감면, 인허가 제도의 대폭 간소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건설 경기 연착륙이 필요하다. 정부의 민간 부동산 시장에 대한 투기 억제 정책은 부동산 가격 안정에 기여하지 못한 채, 건설 투자 침체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고용 유발 효과가 높은 건설 부문의 침체는 곧 고용 상황의 악화로 직결된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SOC 투자 확대, 지방 및 영세 건설 기업에 대한 지원과 같은 건설 경기 연착륙을 유도할 수 있는 다각적인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소비 부문의 급격한 위축을 막아야 한다. 최근 한국 경제의 경기 변동성이 심화된 이유는 내수 부문이 취약하여, 경제 외적인 충격이 발생하였을 때 소비 부문이 경기 변동의 완충 역할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소비 회복은 국민들의 실질적인 소비 여력 확충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우선 경기 하강기에 과도한 조세 부담으로 가계의 가처분 소득마저 감소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가계 부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종합 대책 수립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가계 부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신용 회생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이의 실효성을 확대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특히 현행 소비자 신용 회복 정책은 대상 기준이 협소하여 그 정책적 효과가 미약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라도 배드뱅크, 개인파산제 등의 소비자 신용 회복 제도의 대상 요건을 대폭 완화한 뒤 점차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과 신용이 집중되어 있는 현상을 해소해야 한다. 즉, 비생산적인 부동산 투기 자금이 생산적인 주식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 시중 자금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 외환 시장 불안과 경상수지 적자화

국제 금융 시장의 글로벌 달러 약세 기조 속에서, 국내 경기 하강 및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와 같은 원화 약세 요인이 병존하여 원화 환율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어, 국내 기업들의 환리스크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에 비해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다고는 하나, 대부분의 우리나라 수출 상품들의 경쟁력은 여전히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환율은 수출 기업의 이익과 직결이 되는 결정적 변수이다. 원화 환율은 2001~2004년까지 연평균 약 50원 내외의 완만한 절상 추세를 지속하였다. 그러나 2005년에 들어 절상폭이 약 120원 정도로 급등하고, 2006년에는 연평균 960원대로 하락하며 네 자릿수의 환율 시대가 마감되었다. 2007년에도 이러한 절상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화 가치가 지속적으로 절상되면 국내 경상수지 적자폭 확대가 예상된다. 우선 원화 가치의 절상은 국내 수출 상품의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켜 수출 증가율 둔화의 원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원화의 구매력을 상승시켜 수입이 확대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어, 이에 따라 무역수지 흑자폭은 크게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국내 관광·레저·교육 산업의 낮은 국제 경쟁력을 감안한다면, 해외여행·유학 급증으로 서비스 수지 적자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10년 만에 경상수지가 적자를 기록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특히 만약 2007년 3월을 시한으로 진행중인 한미 FTA 협상이 결렬되거나 지연될 경우에 한미간 통상 관계가 악화되어, 미국에 대한 수출 차질로 경상수지 적자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⁴⁵⁾

따라서 정부는 외환 시장 안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우선 기업들의 환율 위험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정부의 외환 시장 관리 능력을 제고시켜 환율이 급변동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다. 또한 기업들의 달러화에 대한 무역 결제 통화

45) 2006년 1~11월 중 우리나라의 대미(對美) 수출액은 약 409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13.3%를 차지(중국의 21.5%에 이어 2위의 수출 대상국)하고 있다.

의 의존도를 줄이고, 유로화나 엔화 등으로 결제 비중을 늘리는 결제 통화의 다변화 유도 정책도 필요하다. 특히 외환 시장 자유화가 진전됨에 따라 투기적 자본의 유출입이 빈번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국내외 자본에 대한 유출입 감시 기능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국운이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한미 FTA를 성공적으로 타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는 한미 FTA에 대한 추진 의지를 보다 명확히 해야 하며, FTA 타결시 기대 효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국민적 합의 도출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 부동산 버블 붕괴 우려 증대

국내 부동산 가격은 2001년 하반기부터 꾸준히 상승하였다. 이에 정부는 8.31, 10.29, 3.30 대책 등을 통해 양도세와 보유세 증과, 재건축 규제 등의 강도 높은 시장 안정화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권과 중대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지역별·유형별·평형별 양극화 현상은 오히려 심화되었다. 지난 11월 15일에는 수도권 공급 확대와 함께, 한국은행의 지급준비율 인상과 주택담보대출 강화 등의 금융 긴축 등을 추가 대책으로 발표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2~3년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부동산 가격은 단기적으로는 수도권의 국지적인 수급 불안과 2007년 대선을 앞둔 규제 완화 기대 심리의 반영 등으로 안정을 낙관할 수 없으나, 중장기적으로는 기대 수익률의 감소와 주택 공급 확대 등으로 하향 안정화될 전망이다. 특히 1차 뉴타운과 잠실 재건축 지구 및 판교 신도시의 입주가 본격화되는 2008년부터 약 2년간은 부동산 시장의 본격적인 조정 국면이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1990년의 전방위 부동산 안정 대책의 시행으로 투기 목적으로 구입한 부동산이 매물로 쏟아지면서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였고, 이로 인해 가계와 금융권의 장기 복합 불황의 고통을 겪었다. 한국은 주택 담보 대출 비율이 40~60%로 일본

의 100%보다 낮아 부동산 가격의 급락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 그러나 부동산 담보부 가계 대출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급격한 금융 긴축에 따르는 부동산 가격의 급락은 역자산 효과를 초래하여 소비 둔화와 가계 파산 및 금융권 부실을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향후 부동산 정책은 특정 지역에 대한 규제보다 시장 수급 원리를 기반으로 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에 역점을 뒤편어야 한다. 또한 한국에서 부동산은 가장 중요한 노후 대책의 일환일 뿐 아니라 특정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은 높은 교육열을 반영하고 있다는 한국적 특수성과, 소득 증대에 따라 더 나은 주거 문화를 원하는 사회문화적 요인 등을 감안하여 부동산 가격의 급락보다는 점진적인 하향 안정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별 수급 요인을 고려한 공급 차별화와 강남권의 수요 분산 정책 추진, 양도세 중과 등 과도한 규제의 일시 완화를 통한 거래 정상화, 정책의 신뢰성 회복, 고령화 등 연령별·지역별 인구 구조 변화를 감안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 등이 요구된다.

○ 한반도 정세 불안으로 인한 경제 심리 악화

북핵 문제가 장기화되면 국내 가계와 기업들의 소비 및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되어 내수 부진을 더욱 가속화시킬 우려가 높다. 또한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에 외국인 투자 유입 중단은 물론 유입된 자본마저 철수될 우려가 높다. 이는 가뜩이나 국내 투자가 부진하여 고용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게 된다. 특히 최근에 들어 환율, 국제 유가, 지정학적 불안 등의 다양한 대외 리스크가 한국 경제에 충격을 주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 경제는 이러한 대외 충격을 흡수할 수 있을 정도로 내수 기반이 견고하지가 않다.

따라서 북핵 문제가 악화되거나 중장기화되지 않도록 정부는 북미 양측에 대한 위기관리 능력을 제고하고, 주변국들에 대한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민족 공조와 국제 공조의 균형 속에서, 북한에게는 핵 해결 지연과 추가 핵실험에 대해 국제 사회와 보조를 맞추어 엄중한 대응을 하는 것과 함께, 핵 포기에 대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하여 핵 포기 결단을 촉구해야 한다.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들과는 굳건한 동맹체제 재정립과 북핵 문제에 대한 인식의 격차를 축소하는 것을 통해 북한의 긍정적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한미 공동의 건설적 대안 마련에 우리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또한 북핵 협상 과정에서 한국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주한미군 재배치와 작전 통제권 환수, 이라크 파병 등에 대한 중장기 한미 안보 구상과 관계 재정립이 요구된다. 특히 정부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리스크 관리 능력을 키우는 일이 시급한 실정이다.

나아가 반드시 북핵 문제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에 들어 환율, 유가 등 국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외적 여건들의 방향성이 급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외환위기 이후에 구축된 조기 경보 시스템, 국가 위기관리 시스템, 비상 계획 (Emergency Plan) 등에 대한 전반적인 재점검 및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대선 포퓰리즘과 정치 경제

마지막으로 2007년에는 선거를 의식한 인기영합주의의 포퓰리즘(Populism)에 입각한 실현 가능성이 낮은 정책이 남발될 우려가 높다. 정책의 일관성이 사라지고, 부처간 정책 혼선 양상이 심화되어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욱 증폭될 것이다. 특히 인기영합주의가 자칫 반(反)기업 정서로 이어질 경우 대기업에 대한 공정 거래 정책이 혼선을 빚거나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만약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된다면 사실상 국내 투자를 주도하고 있는 대기업들의 경제 심리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는 외환위기 이후 설비투자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데 반해, 국내 기업들의 해외 투자는 급증하는 ‘자본의 한국 경제로부터의 탈출 (Exodus)’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는 원인이 될 우려가 높다.⁴⁶⁾ 이에 따라 한국 경제

는 결국 투자 부진에 의한 자본 축적 저하로 성장 잠재력이 고갈되어 영원히 저성장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다.⁴⁷⁾

2007년에는 대선 정국에 의한 포퓰리즘적 선심성 공약이 남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경제 정책의 입안 및 집행 과정에 정치 논리가 개입될 여지가 많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라는 국내 정치 행사가 있더라도, 정부 정책은 경제 원리에 입각한 합리성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최근과 같이 경기 인식, 기업 규제, 조세 정책 등에서 당정청간 정책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무 부서인 재경부의 경제 정책 조율 기능을 강화시켜 시장에 불필요한 불확실성을 유발시키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특히 정부의 기업 정책은 민간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해주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 공장 설립 제한 규제의 완화, 분담금 제도의 축소 등과 같은 투자 활성화 정책이 절실하다. 특히 공정거래정책의 방향은 대(對) 기업의 지배 구조와 같은 경영권에 대한 사안보다는, 독과점 시장의 폐해 시정, 소비자 보호 등과 같은 시장 경제 원리의 구축에 보다 주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경제 정책을 추진할 시 경제 한 측면만을 보고 정책을 추진하기보다, 경제 전반에 대한 영향을 고려한 종합적 문제 해결 지향 정책(Total Solution Policy)을 추구해야 한다.

46) 우리나라의 연도별 해외투자 규모는 1997년 약 36.9억 달러에서 2005년에 약 67.2억 달러로 급증하였으며, 2006년 1~9월의 기간만으로도 약 75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47) 주요 선진국들이 1인당 국민 소득(1인당 GNI 기준)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로 진입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은, 미국, 영국, 독일은 평균 10년 내외, 일본과 싱가폴은 그 절반인 5년의 기간이 소요되었다. 이러한 차이를 불러온 주요 원인중 하나는 투자 증가율의 차이에 있었다. 서구 강국들은 해당 기간 내 약 4%의 설비투자 증가율에 머물렀던 반면, 일본과 싱가폴은 10% 내외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 성장, 자유, 화합의 선진 경제 기반 구축 - 경제 선진화 과제

돌이켜 보면 한국 경제가 저성장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21세기 대의 여건의 변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데 근본 원인이 있다. 금세기에 들어 세계는 20세기의 냉전 체제가 해소되고 효율성과 경쟁을 중시하는 자유 시장 원리가 세계의 보편적 이념으로 확산되고 인간의 지적 능력과 창조력이 경쟁의 핵심이 되는 지식 사회가 빠르게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가치관의 혼란, 계층간·세대간의 갈등과 대립 등으로 이러한 외부적 세계 변화에 적응하지 못함에 따라 국가 전반의 정치 경제 사회 시스템이 낙후되고 생산성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 새해 정책 키워드 - 성장, 자유, 화합

한국 경제의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것을 막고, 한국 경제가 선진 경제권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2007년에 무엇보다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신성장 동력 확충(성장), 경제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를 위한 자유 시장 경제 창달(자유), 화합을 통한 국력 결집(화합)에 힘써야 할 것이다.

신성장 동력 확충 (성장) : 우선 한국 경제는 노동과 자본 투하량에 의해 결정되는 투자주도 성장 패턴을 벗어나, 새로운 기술 개발과 경영 혁신에 기초하는 선진국형 기술 혁신 주도 성장 단계로 진입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까지의 성장 기반을 넘어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의 개발과 확충이 필요하다.

우선 경제 발전 전략은 성장 중심의 경제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성장 없이 한 계층에서 다른 계층으로 부(富)를 단순히 이전하는 영화(零和, zero-sum) 방식의 분배 정책은 지속성을 보장하기 어렵다. 결국에는 분배에 사용될 재원이 고갈되는 상황에 이르게 될 뿐이다. 따라서 상호 이해와 협력 속에서 사회 전체의 성장 활력을 높여 전체적인 부를 증대시키기 위한 비영화(非零和, non zero-sum) 방식의 '지속 가능 분배를 위한 성장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21세기 경제 사회 환경 속에서 높은 부가가치와 성장 잠재력을 지닌 미래 유망 산업을 발굴하여 중장기적으로 키워 나가야 한다. 현재 급속한 기술 혁신이 전개되고 있는 정보통신(IT) 및 생명공학(BT) 분야와, 고령화 시대의 도래와 환경 중시 문화의 확산에 따르는 환경(ET)과 레저 문화(CT) 부문 등이 차세대 성장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또한 원자 차원에서 물질을 조작 가공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새로운 물질을 창조하는 미세 가공 산업(NT) 역시 21세기의 주력 산업으로 발전할 전망이다. 국내 산업의 현실과 산업 연관 효과 등을 감안할 때 정보통신, 극소(極小) 전자 기기, 멀티미디어, 대체 에너지, 생명 산업을 한국의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신성장 산업 부문에 대한 기업 자본금 규제 완화, 다양한 기업 설립 형태 보장과 같은 새로운 지원 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특히 벤처 자본이 자본 시장을 통해 기업의 성장 원동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자본에 대한 각종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소위 첨단 산업, 지식 기반 산업으로의 산업 구조 전환이 반드시 우리에게 절대적 우위가 있는 경쟁력을 확보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현재 규모의 경제 효과를 누리고 있는 자동차, 반도체와 같은 기존 국내 주력 산업에 첨단 기술을 접목하는 기술의 융합과 경영 혁신을 통해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는 것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경제 성장의 주역으로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보완적 협력 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중시해야 할 새로운 발전 전략이다. 벤처기업과 같은 중소기업은 창의력을 발휘하고 새로운 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우리 경제의 고용이나 수출 경쟁력 확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더욱이 무국경(Borderless Market)의 무한 경쟁 속에서 한국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자원 조달이나 투자 능력 그리고 자원 활용의 효율성 그리고 세계적으로 알려진 기업 이미지 등을 한층 더 살려나가야 한다.

서비스업의 고도화도 지속 성장을 위해 추진해야 할 시급한 과제중 하나이다. 서비스업은 고용 창출력이 매우 높을 뿐더러 경제를 소프트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

다. 한국도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 서비스업의 상당 부분은 여전히 저부가가치의 생계형 자영업이 차지하고 있다. 즉, 국내 서비스업은 외형만 클 뿐 아직 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지식 기반 서비스업, 제조업 지원 서비스업 등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서비스 업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적인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한국 경제가 저성장 함정에 빠져 있는 것은 실물 경제와 금융 시장의 연결 고리가 붕괴되어 풍부한 유동성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유입되지 못하는 데에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는 국내 투자은행업 지원, 대형 기업신용평가회사(CB) 육성, 투자은행 서비스의 전문성 제고 등을 통해 자본 시장을 선진국 수준으로 육성하여 시중 부동 자금이 실물 부문에 투자되도록 하는 금융 선순환 구조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한국 경제의 성장은 상당 부분 수출에 의존하고 있다.⁴⁸⁾ 그러나 우리나라 수출 산업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우리의 수출 대상 지역은 중국과 선진국에 편중되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수출 대상 지역을 중국 이외의 BRICs, TVT⁴⁹⁾ 등 새로운 시장으로 다변화할 수 있는 수출 정책이 요구된다. 특히 2007년 상반기중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한미 FTA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과의 FTA도 적극 추진하여 국내 상품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해 나가야 한다.

자유 시장 경제 창달 (자유) : 선진국가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성장력 제고 노력도 중요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한국 경제의 비효율성 문제를 극복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규제 개혁에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며, 큰 정부보다는 작은 정부를 추구하여, 국내 자본의 생산성, 민간의 창의성, 경제의 효율성을 제고시켜야 한다.

48) 한국의 2001 ~ 2005년 기준 수출의존도(수출/GDP)는 연평균 약 33.2%, 무역의존도(수출입/GDP)는 63.8%에 달하고 있다.

49) TVT는 터키, 베트남, 타이틀 의미한다.

무엇보다 불필요한 규제가 민간의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특히 창업, 투자 등에 대한 규제는 최소한의 수준에서 그쳐야 할 것이다. 또한 기업과 기업인의 업적과 사회 공헌도를 인정해주고 격려해 주는 기업 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시급하다. 기업과 기업인의 사기 진작을 통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기업가 정신을 부활시킬 때에 비로소 국내 경제는 다양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다.

궁극적으로 정부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해 나가야 한다. 정부는 이제 직접 경제 발전을 주도하는 역할보다는 경제 발전 과정에서 공정성과 효율성이라는 규칙을 제정하고, 규칙의 이행 여부를 감시·감독하며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 이를 조정하는 기능만을 담당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비대해진 정부 기능과 조직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는 한편, 공기업의 민영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

화합을 통한 국력 결집 (화합) : 또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경제 역량을 모으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간의 화합과 신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지금 한국 사회는 계층간 갈등과 대립이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불필요한 국력의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국내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이념간, 계층간 대립에서 벗어나 서로 이해하고 화합하여 경제력을 결집하는 상생의 경제를 창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중소기업간, 도·농간, 협력 문화가 조속히 형성되고 정부의 사회 갈등에 대한 적극적 중재와 조정자의 역할이 증대되어야 한다.

국내 사회의 화합을 위해서는 정부의 갈등 중재 역할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최근 심화되고 있는 소득 계층간, 대·중소기업간, 도·농간 갈등 사항에 대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한 사회적 합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상생 시스템을 구축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특히 한국 경제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중 한 가지인 양극화 현상 해소에 대한 재원 마련 방안은, 시장 경제 원리 내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강구되어야 정책의 추진력을 확보하고 정책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정부는 사회 구성원 사이에 유발되는 다양한 갈등 현상에 대해서 적극적인 중재와 조정자의 역할을 통해 사회 통합력이 훼손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다.

무실역행의 리더십 : 이와 같은 성장, 자유, 화합 정책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힘을 모아서,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화합과 실천의 리더십이 요구된다. 2007년은 참되고 실속 있는 정책 과제들을 힘써 실천하는 무실역행(務實力行)의 리더십을 확립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해가 될 것이다.

○ 경제 사회 시스템의 혁신

다음으로는 국내 경제의 선진화를 중장기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정치 경제 사회 시스템을 혁신해 나가야 한다. 사회 구성원간의 화합과 신뢰 제고를 위한 법치주의 확립, 선거 제도와 정치 문화의 개혁, 글로벌 스탠다드 구축, 시장 경제 원리 정착이 이를 위한 과제이다.

화합과 신뢰 제고를 위한 법치주의 확립 :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준법정신이 하루빨리 생활화되어야 한다. 자유 민주 사회에서 법은 최소한의 도덕규범이다. 합의된 약속과 원칙은 준수되어야 한다. 프란시스 후쿠야마(Francis Fukuyama)는 한 국가나 사회의 발전 가능성은 각 구성원간의 신뢰 관계에 의해 결정된다고 갈파하였다. 이러한 신뢰 관계는 교통 법규에서부터 노사 갈등 그리고 국가 통치 행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회 정치 활동이 법과 원칙에 의해 이루어질 때만이 형성될 수 있다.

선거 제도와 정치 문화 개선 : 또한 갈등과 대립만을 조장하는 선거 제도와 정치 문화가 개혁되어야 한다. 금권 선거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선거 공영제를 확립하고, 정당의 민주화를 이루는 것이 이를 위해 시급한 과제다. 당내 민주화를 통해 당수 중심의 1인 지배 체제가 극복되어 정당의 폐쇄성과 밀실공천과 같은 악습들이 사라져야 한다. 특히 정당과 정치 지도자들의 지역감정에 호소하고 매달리는 우중(愚衆) 정치가 과감히 청산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치 개혁 과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되려면 시민 단체와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 공정한 원칙과 법질서를 세우고 이를 준수하도록 시민 단체와 언론은 정치권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글로벌 스탠다드 구축 :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세계 경제 기준에 따르는 행동 규범이 확립되어야 한다. 우리의 가치 기준이나 규범에 잘 맞지 않더라도 세계화 환경에서는 투명한 회계 기준, 민주적 기업 지배 구조와 같은 선진국들의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경제 규범과 기준이 생활화되어야 세계화 경영에 동참할 수 있다. 그러나 본래 글로벌 스탠다드는 강대국의 이익을 반영하는 강대국의 논리가 지배하기 마련이다. 비록 강대국의 논리 틀인 글로벌 스탠다드 내에서도나 경제적 약소국들의 지역적 결속을 통해 경제적 약소국들의 이익 (Speciality)을 반영하여 협력하는 가운데 경쟁 (Coopetition)하는 전략을 강구해야 한다.

시장 경제 원리 정착 : 시장 경제 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수급 원리에 따라 정책 결정을 하는 시장 경제 원리를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 정책 수단의 선택 폭이나 그 효과가 과거와는 달리 축소되고 있는 자유화개방화 시대에 정부 정책 개입을 통해 수급을 조절하여 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용하기는 어렵다. 정부의 경제 정책이 시장 경제 원리에서 벗어나 민간 부문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무시하는 경우, 경제 구조를 왜곡함으로써 경제의 비효율성만이 초래된다.

○ 창의적 교육 개혁의 추구

한국 경제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정치·경제·사회의 변화와 함께 21세기 지력(知力) 시대에 걸맞는 교육 혁신도 이루어져야 한다. 결국 국가 시스템의 선진화나 효율성의 증대는 교육과 훈련에 달려 있고, 특히 새로운 시대에는 인간의 지적 능력이 가장 중요시되고 창조적 가치의 생산이 인간 활동의 보람이고 목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양성과 개성이 존중되며 새로운 가치 창조가 중시되는 교육 개혁 없이는 사회 시스템의 효율성은 증진될 수 없으며, 지금과 같이 입시 위주의 암기식 교육으로는 창조성과 다양성이 강조되는 21세기 경쟁에서 우리 경제는 낙오될 수밖에 없다. 인간의 창의성과 지적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 정책에 대한 획일적 평등주의를 지양하고, 교육(教育)과 훈련(訓練, discipline)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혁해 나가야 한다.

획일적 평등주의 타파 : 교육 혁신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육 정책 입안자들의 획일적인 평등주의가 타파되어야 한다. 인간의 성장 단계로 볼 때 교육은 크게 세 가지 기능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된다. 첫째는 의식주 해결과 같은 인간 사회에 생존을 위한 ‘생존(生存)’ 교육이고, 둘째는 사회생활에 원만히 적응할 수 있는 ‘인성(人性)’ 교육이며, 셋째는 자신의 생존만이 아니라 인간 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창의성(創意性)’ 교육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교육은 획일적 평등주의에 빠져 창의성 교육면에서 완전 실패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

경쟁에 기반을 둔 교육과 훈련 시스템 개혁 : 과거 농경사회나 산업화시대에도 교육은 물론 중요했지만, 현재 빠른 속도로 펼쳐지고 있는 소위 ‘지식사회’, 혹은 ‘지식기반 경제시대’에서 교육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중요하다. 중국과의 기술 격차가 2.1년으로 좁혀진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2년 후, 또는 10년 후 글로벌 경제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휴먼 캐피털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피터 드러커(Peter Drucker)는 학교 교육이 지식사회의 발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한마디로 학교 교육은 지식사회의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인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최근 독일, 영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들은 각종 교육 개혁안을 내놓고 있다. 이들 개혁안의 공통점은 지식사회가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고 길러낼 수 있도록 ‘평준화’가 아닌 ‘경쟁’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이다.

○ 인간 가치 존중과 창조적 도전 정신 - 21세기 자본주의 정신

국민 역량을 결집하고 정부 정책 목표를 달성하려면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가치관을 확립해야 한다. 다시 말해 비전을 공유하고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다 함께 나갈 수 있는 공통의 가치관과 철학이 분명해야 계층간, 세대간, 지역간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협력과 화해를 이룰 수 있다.

자본주의에 대한 올바른 이해 : 2006년 사회 이슈가 되었던 사행 산업 문제는 한국 사회에 단기적이고 물질적 이익에만 집착하는 ‘천민자본주의 (Pariah Capitalism)’가 확산되어 있음을 단적으로 잘 나타내 주고 있다. 물론 사행 산업으로부터 유발되는 조세 수입이 지역 개발, 사회 취약 계층 지원 등에 사용될 재원으로 사용된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 그러나 아무리 취지가 좋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사행 심리를 이용하여 재정 수입을 확대하는 방법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을 것이다. 이는 막스 베버(Max Weber)가 언급한 사치와 허영을 경계하고 근면과 절약이 덕목이 되는 자본주의 경제 정신을 상실케 하는 것이다.⁵⁰⁾ 사회 내 뿌리 깊게 번져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만 벌려는 사행 심리와 천민자본주의를 없애고 땀을 흘린 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건전한 자본주의 정신이 확산되지 않고는 선진국으로의 진입은 어려울 것이다.

신(新)인본주의 가치관 확립 : 또한 새로운 자본주의 철학으로서 자본주의의 기본 기능인 시장 원리에 인간 가치와 존엄성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는 인본주의를 결합하는 인본자본주의 (人本資本主義) 가치관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인간의 창의성을 최고로 중시하는 21세기 지력 사회에 대응하고 타락한 물질주의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본주의가 중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경제 정신의 정립 : 인본자본주의가 경제 발전 전략으로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새로운 목표에 도전하여 성취하는 것을 의미하는 ‘창조적 도전 정신’과 지역간·세대간·계층간 갈등과 장벽을 해소하여 국민 화합과 국력의 결집을 유도하는 ‘역동적 화합 정신’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50) Max Weber, *The Protestant Ethic and the Spirit of Capitalism*, Talcott Parsons, trans. New York: Charles Scribner's. 1958.

□ 기업은 사회 변화 적응력 제고를 통한 지속 성장 추구 - 5대 경영 전략

2007년은 우리 기업들에게는 시련의 한해가 될 전망이다.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및 글로벌 환경 등 기업을 둘러싼 국내외 경영 여건에 대한 전망들이 올해 우리 기업들의 실적 달성이 순조롭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 핵실험으로 불거진 지정학적 리스크 상황에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할 것인가가 주요한 과제로 부각되면서, IMF 외환위기 이후 꾸준히 내실을 다져오던 우리 기업들에게 다시 한 번 위기 극복의 지혜와 실천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올해 우리 기업들은 예견되는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미래 성장의 기회 요인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역량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 국내외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 증대

2007년 국내외 경영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움이 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거시 경제적 측면을 살펴보면, 국내 경제의 결정적 변수인 금리와 환율 등 국제금융 시장에서의 원화 강세 및 선진국과의 금리 격차 축소,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의 수급 불안정이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경제 변수들의 불확실성은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는 국내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시장 위축과 시장 우위 확보를 위한 기업들의 경쟁 격화로 이어져, 기업 수익성 악화는 물론, 나아가 경상수지 적자와 국가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 아울러 기업의 설비투자 부진이 계속되고 경직된 노사관계 및 청년실업 문제의 지속 등 고용 불안이 더욱 심화된다면 우리 기업들이 총체적 저성장의 늪에 빠져들 우려마저 배제할 수 없다.

정치적 측면에서는, 북한 핵실험으로 촉발된 지정학적 리스크가 표면화되면서 미국을 위시한 국제 사회의 대북 압박으로 경영 불확실성이 더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무력 충돌 등 사태가 더욱 악화된다면, 외국인 투자 자금 이탈과 장기적 기업 투자의 위축으로 이어져 내수경기가 급랭할 위험까지 도사리고 있다. 또한 올해는 차기 대권을 위한 대통령 선거도 기업 환경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과거의 전례로 볼 때 정치 논리로 인한 선심성 정책이 공약으로 채택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는, 청년 실업 문제가 장기화되면서 이른바 ‘프리터(Free Arbeiter)’와 같은 비정규직 양산으로 인한 세대간, 계층간 갈등의 표면화가 우려되고 있다. 더욱 빨라지고 있는 고령화와 여성의 사회적 역할 증대 등도 우리 기업들의 효율적인 인력 활용이란 측면에서 지속적인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유비쿼터스 환경의 진화, 소비자 주도형 시장 확대, 추구가치 다원화 등 사회문화적 트렌드 변화가 빨라지면서, 어떻게 고객을 만족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도 우리 기업들의 해묵은 과제로 대두될 것이다.

세계로 눈을 돌려보면, 미국 등 주요 교역국 경기의 동반 하락이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 인도 등 이른바 친디아(Chindia)로 불리는 신흥시장은 올해에도 꾸준한 성장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을 추구하는 친디아 기업들의 활발한 글로벌 M&A 움직임도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이다. 한편 사회적 책임과 관련하여 국제표준 제정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대응 방안도 올해 기업 경영에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 경영 키워드 : '사회 친화적 성장 기반 구축'

대내외 경영 환경에 대한 어두운 전망이 우려됨에 따라, 2007년 기업들은 이러한 위기 상황을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하느냐의 여부가 향후 지속성장을 좌우하는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위기 상황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기업에게는 매년 부딪히는 문제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일시적인 위기 극복만이 아니라, 미래 성장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역량과 기반을 어떻게 구축하느냐 하는 것이다. 즉, 단기적 위기 대응보다는 장기적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기반 마련에 전략의 무게 중심을 두어야 한다. 따라서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제고하여 다양한 가치 구현을 통한 조화로운 성장 추구라는 측면에서, 2007년 기업 경영의 초점은 사회 친화적 성장 기반 구축에 맞춰져야 할 것이다.

이에 기업 경영의 전략적 방향성은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질적 성장에 중점을 둔 내실 추구하고 기업가치 제고에 주력해야 한다. 특히 브랜드 파워 및 기업 평판 등 무형자산 관리에도 더욱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기업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기업 외형은 구조조정 등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기 쉽지만, 소비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구축된 브랜드 파워 등 안정적인 무형자산은 더욱 빛을 발하기 때문이다. 글로벌 우량 기업들의 경우,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높은 브랜드 인지도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경영 실적을 올리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핵심 역량 및 인프라 구축에 힘을 쏟아야 한다. 특히 어려운 경영 환경일수록, 기업의 핵심 역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역량의 분산을 막기 위한 선택과 집중은 필수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핵심 역량은 기업 경영의 기본 요소인 혁신적 인재와 경영 효율화는 물론, 사회 적응력 배양을 통한 조직의 유연성을 필요로 한다. 이런 맥락에서 조직 구성원의 사회지능(SQ: Social Intelligence Quotient) 향상과 최고경영진의 SQ 리더십을 바탕으로, 조직 전체의 친화력과 대외 교섭력을 강화하여 안팎의 위기 및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 조직 구성원들의 SQ 향상을 위한 다양한 인사 및 교육 프로그램과 효율적 성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인

프라 구축에도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또한 조직 구성원의 창의성을 장려하고 혁신에 대한 강한 동기 부여와 사기 진작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환경 변화에 능동적이며 유연한 대응을 추구해야 한다.

셋째, 지속가능경영을 추구해야 한다. 오늘날 사회적 책임 수행은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니다. 경제적 수익 추구뿐만 아니라 능동적인 사회적 책임 수행으로 소비자로부터 존경받는 기업을 지향해야 한다. 소비자의 신뢰와 지지가 뒷받침되어야만 지속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경제적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는 핵심 수익 사업과 신규 고부가가치 사업의 균형적 사업 구조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기업의 현실에 맞는 다양한 사회적 책임 수행 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회 친화적 기업문화 구축을 통하여 소비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자 모두의 신뢰 증진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2007년 전략 방향성 및 핵심전략

2007년 경영여건	경제	정치	사회 / 문화	글로벌 환경	
	-소비 위축 -설비투자 부진 -물가상승 압력 지속 -경상수지 악화 -주식 및 금융시장 불안	-북핵사태로 한반도 위기 고조 -대선정치논리 우위로 경제 불확실성 증가	-청년실업 지속 -고령화의 가속 -여성의 사회적 역할 확대 -추구가치 다원화 -소비자 주도 시장 활발	-주요 교역국 경기 둔화 -개방적 기술혁신 확대 -친디아 시장의 성장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심과 요구 증대	
경영 키워드	‘사회 친화적 성장기반 구축’ ‘환경변화에 대한 유연성 제고, 다양한 가치구현을 통한 조화로운 성장 추구’				
경영전략 방향	내실경영을 통한 가치 제고	핵심역량 및 인프라 구축		지속가능경영 추구	
	-경영 리스크 최소화 -무형자산의 가치 극대화	-인재 육성 및 경영 프로세스 체계화 -대외 환경 변화에 대한 유연성 강화		-기존/신규 사업의 조화 -사회 친화적 기업문화 창조	
핵심 전략	총체적 리스크 관리	무형자산가치 제고	고객가치 극대화	균형적 사업구조 구축	사회지능(SQ) 내재화
	-조거위험 경보 체제 구축 -경영권 안정화 노력 지속	-브랜드가치 제고 -지적재산권 보호	-고객 관계 재정립 -사회적 책임의 능동적 대응 -다양한 고객가치 대응	-핵심사업 집중 투자 -고부가가치 신사업 지속적 탐색	-구성원의 SQ 향상 -SQ 리더십 제고 -대내외 우호 여건 조성

○ 5대 경영 전략

전략 포인트 1 : 총체적 리스크 관리 및 경영권 안정화 노력 지속

2007년은 특히 유가, 환율, 금리 등 원자재 및 금융시장 불안정성으로 인해 유동성 위기가 우려되고 있다. 여기에 북한의 핵실험으로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표면화되면서 우리 기업들의 경영 리스크는 더 한층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 증가는 기업들에게 총체적인 리스크 관리 역량을 요구한다.

우선 기업들은 전사적인 위기 경영 체제 도입으로 거시 환경적 악재에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 즉, 사업 위험, 신용 위험 등 경영과 관련된 모든 위험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다양한 실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경영 불확실성이 증대된 만큼 우선 다양한 정보 채널을 바탕으로 조기경보체제(Early Warning System)를 구축하고,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고려한 비상 계획(Contingency Plan) 수립이 요구된다. 구체적으로는 비상대책위원회 등 위험관리 전담부서의 설치 및 전문 인력 양성으로 상시 위험관리 체제로 내부 조직을 정비해야 한다. 또한 신규 사업뿐만 아니라 기존 사업에 대해서도 현금 수익성을 기준으로 철저한 재평가를 통해 건전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유 자산의 유동화, 목표 재무 비율 등을 통해 유동성 위험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수출 시장 다변화 노력과 함께 글로벌 아웃소싱,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가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전 세계적인 M&A 추세는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글로벌 투기 자본 및 적대적 M&A 세력에 대비하여 경영권 안정화 노력도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경영 환경의 악화로 허약해진 기업은 적대적 M&A 세력의 표적이 되기 쉽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내적으로는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이사회 독립 및 투명성 확보 등으로 기업 가치를 제고시킴으로써 원천적으로 적대적 M&A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외적으로는 전략적 제휴를 통한 우호세력을 확대하여 경영권을 위협하는 리스크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해외 우호주주 확보를 위한 측면에서 전방위적인 IR(Investor Relation) 활동을 전개하여 국제 신인도를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전략 포인트 2 : 무형자산 가치 제고에 집중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으로 보수적 경영이 요구되는 2007년은 외형 확장을 통한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성장 추구로 기업 내실을 다지는 방향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글로벌 우량기업으로 평가되는 선진기업들의 공통점은,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브랜드로서 높은 무형 자산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실례로 최근 비즈니스위크와 브랜드 평가기관인 인터브랜드(Interbrand)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강력한 브랜드를 소유한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시장을 지배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미국 500대 기업의 기업 가치를 살펴보면, 1980년대까지는 유형 자산이 기업 가치의 70%에 육박했으나 최근에는 25%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기업 경쟁력이 유형 자산에서 점차로 무형 자산으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 2005년, 세계 주요 브랜드와 한국기업의 브랜드 순위 >

주요 글로벌기업	2003년 순위	2004년 순위	2005년		
			순위	가치(억 달러)	2004년 대비 가치 상승률(%)
코카콜라	1	1	1	670.0	-1
마이크로 소프트	2	2	2	569.2	-5
IBM	3	3	3	562.0	5
GE	4	4	4	489.0	4
인텔	5	5	5	323.1	-9
노키아	8	6	6	301.3	14
도요다	11	9	7	270.4	12
:			:	:	:
삼성전자	25	21	20	161.7	8
현대자동차	-	84	75	40.7	17
LG전자	-	97	94	30.1	14

자료 : 비즈니스 위크, 2005년 세계 100대 브랜드 기업.

따라서 우리 기업들은 브랜드 가치와 같은 무형 자산의 확대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특히 브랜드 자산(Brand Equity)을 구성하는 요소별로 가치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실행 전략이 필요하다. 첫째, 국제적 인지도를 강화하기

위해 글로벌 시장의 공략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2005년 글로벌 브랜드 가치 100대 기업에 국내 기업은 겨우 3개뿐이라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기업들의 브랜드 가치는 아직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기존의 우량 고객을 충성 고객으로 전환하는데 더욱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경영 불확실성 증대로 시장 확대가 어려워진 상황에서는, 전체 고객을 대상으로 한 역량 분산보다는 우량 고객을 집중 공략하여 브랜드 충성도를 높이는 것이 시장 경쟁력 유지에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셋째, 기존의 브랜드 이미지보다 더욱 고급화된 이미지로 소비자에게 연상되도록 전환되도록 하는 제품혁신이 필요하다. 최근 저가 브랜드를 앞세우고 급속히 성장하는 중국, 동남아 등에 대하여 우리 기업들이 명품 브랜드로 경쟁 우위를 확고히 하고 있는 사례는 시사 하는 바가 크다. 넷째, 고객에게 지각되는 제품의 질적 차별화를 추구해야 한다. 특히 정보 환경의 확산으로 제품 기술이 평준화되는 가운데, 디자인이 제품의 차별성과 부가가치를 결정하는 경쟁력으로 부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투자를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전략 포인트 3 : 고객 관계 재정립과 사회적 책임의 능동적 수행

사회가 다양화되고 정보 환경이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소비자들의 추구가치도 빠르게 다원화되고 있다. 이에 변화하는 고객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기업들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따라서 경기 둔화로 실질 구매력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2007년은, 다양한 고객 가치 구현으로 고객 만족을 극대화를 지향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고객 이탈을 막는 전략 수립이 요구된다.

과거 소비자는 단순히 생산된 제품을 소비하는 수동적 대상이었으나, 오늘날은 기업과 함께 신제품을 개발하기도 하고, 나아가 스스로 콘텐츠를 개발하여 배포하는 등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도 한다. 이른바 생산자(Producer)와 소비자(Consumer)의 합성어를 나타내는 프로슈머(Prosumer)가 주도하는 시장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프로슈머들은 제품 개발의 성공가능성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제품에 대한 입소문을 담당하는 시장 선도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LG전자의 '초콜릿 폰'이나 두산의 '처음처럼'과 같이 2006년에 히트한 많은 제품들은 프로슈머가 참여한 제품들이다. 따라서 소비자를 단순히 소비 대상으로 보

는 기존의 마케팅에서 벗어나, 시장 주도적 소비자들의 참여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함께 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동반자로서의 인식이 필요하다.

한편, 지역사회의 발전과 환경 보호 등 소비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의 추구 가치가 사회적, 공공적 욕구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처럼 다양화되는 고객 가치 구현을 위해, 특히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 : SR)을 능동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신뢰 증진과 기업의 대내외 이미지 향상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 구현될 수 있다. 지역 사회에 대한 물적 지원과 인적 교류 등 다양한 시혜적 방안뿐만 아니라, 지배구조의 개선, 인권 및 환경에 대한 배려 등 경영의 윤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기업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지속가능한 성장(Sustainable Growth)을 위해서 기업은 환경적, 윤리적, 사회적 책임의 능동적 수행은 더 이상 선택적 사항이 아닌 필수적 요소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기업은 성장할 수 있어도 장수할 가능성이 적으며, 비록 장수한다 하더라도 존경받는 기업은 되지 못한다는 점을 새삼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전략 포인트 4 : 수익성 중심의 사업 재편과 신규 사업과의 조화 추구

올해 우리 기업들은 핵심역량 강화를 통한 기존 사업의 고도화와 미래 성장 동력원의 확보하기 위한 신규 사업의 탐색이 균형을 이루는 사업 구조의 재구축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될 것이다. 기존 시장에서의 성공에 안주해서는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오늘날의 기업 현실이다. 따라서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사업다각화와 업종 전환 등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며, 지속적으로 미래의 성장 동력을 개발하고 새로운 시장을 탐색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IBM의 사례를 살펴보면, 고객 수요의 시대적 변화에 따라, 출퇴근 기록계, 전산용 천공기, 전자계산기, 컴퓨터 등 창립 이후 끊임없이 주력 사업 분야의 변신을 도모하고 사업 구조를 재조정하면서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저성장 국면에서는 우선, 수익성 중심의 핵심 사업에 역량과 자원을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총투자는 건축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사업 재평가를 통해 핵

심 사업의 재정의와 유망 성장 사업에 대한 투자를 선별적으로 추진하여 균형적 사업 구조를 이루어야 한다. 즉 자사의 지속성장을 위한 자금 젖줄(Cash Cow) 역할을 하는 핵심 사업에 집중 투자를 하는 한편, 신규 진출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 위험을 분산하면서 단기간의 수익 창출보다는 미래 경쟁력에 중점을 둔 균형적 사업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신규 사업은 기업 역량의 분산을 막기 위해, 기존의 핵심 사업과 관련하여 융합형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분야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에 산업간, 기술간 융합으로 신제품·신시장의 창출을 지향하고, ‘핵심 사업’보다는 ‘핵심 기술과 자산’을 통한 사업 재편으로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경쟁력 확보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우선적으로는 기존 사업의 틈새시장을 대상으로 한 신기술 개발에 초점을 두면서, 궁극적으로는 차세대 성장 동력인 BT·NT·IT·CT 사업, 수소 연료 등의 대체 에너지 관련 사업 등 고부가가치 신성장 산업으로의 사업 구조 재편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M&A는 올해도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이다. 특히 잉여자금의 투자 활성화 측면이나 사업상의 시너지를 위해 상대적으로 위험이 큰 신규 투자보다는 A&D⁵¹⁾가 적극 검토될 필요가 있다.

전략 포인트 5 : 사회지능(SQ) 향상을 통한 사회 친화적 기업 지향

성공한 사람이나 기업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 하나로, 사회지능지수(SQ : Social Intelligence Quotient)가 중요한 가치로 부각되고 있다. ‘사회지능’이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긍정적이고 효과적으로 만들어내는 능력을 말한다. 즉 상대방의 감정과 의도를 읽고 타인과 잘 조화되는 인간관계를 구축하는 능력이다. 사회지능이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관용적이고 자기 자신의 존재를 긍정적으로 여기며 조직의 협동적 성과에 대한 만족감이 높다. 기업 활동의 주체는 사람이며 기업 경영이란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끊임없는 상호 작용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조직 구성원의 사회지능이 높아질수록 경영 성과의 향상으로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51) A&D(Acquisition & Development)는 상장된 저성장 업체를 인수하여 고성장 업체로 바꾸는 기업인수방식을 지칭한다.

인적 네트워크가 다양화되는 현대 사회에서는 사회지능이 높은 사람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기업이 처한 상황, 사업 영역, 기업 규모에 따라 차별적인 사회지능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사회지능이 높은 인재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사회지능을 개발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교육 및 훈련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구성원들의 공식적, 비공식적 채널을 다양화하여 수직적, 수평적 관계 형성을 촉진시켜야 한다. 업무 영역에 따라 차별화된 사회지능 개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도 필요하다. 또한 조직 구성원들의 사회지능이 전사적 기업 성과로 반영되도록 적절한 성과관리 및 인사 시스템에 의한 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야 할 것이다. 개개인의 사회지능 향상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고 조직 전체의 대외 교섭력 및 친화력을 제고하여, 기업 홍보 차원에서 대내외 우호적 여건 조성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마케팅 차원에서도 사회지능 향상을 통하여 국내외 시장에 대한 영업력을 강화함으로써 경기 둔화에 따른 소비 위축 등 환경 변화에 따른 유연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한편 조직 구성원의 사회지능이 높아진다고 반드시 기업 전체의 사회지능이 향상된다고 할 수는 없다. 이를 위해서는 조직 구성원들로 하여금 자신의 업무에서 최선의 몰입 상태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SQ 리더십’이 필수적이다. 경영자를 비롯한 중간관리자 스스로가 긍정적인 사고와 열정을 갖고, 다양한 공식적, 비공식적 대화 채널을 통하여 조직 전체에 전파해야 한다. 경영 리더는 조직 전체에 긍정적 에너지가 충만하도록 ‘감성의 리더’를 추구하고, 구성원 개개인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관심의 리더’를 지향해야 한다. 또한 구성원들이 자신의 업무에 몰입하여 높은 성과를 실현하도록 하는 ‘열정의 리더’가 되어야 하며, 조직 전체가 하나로 통합되어 높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도록 하는 ‘화합의 리더’를 지향해야 한다. 각 기업은 SQ 리더십을 통하여 개개인의 사회지능 향상, 나아가 전사적 역량으로 내재화함으로써 사회 대응력을 높여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극복하여야 할 것이다. **HRI**

HRI 經濟 指標

➤ 主要 經濟 指標 推移와 展望

		주요 경제 지표 추이와 전망						
		2001	2002	2003	2004	2005(P)	2006(E)	2007(E)
국 민 계 정	경제성장률 (%)	3.8	7.0	3.1	4.7	4.0	4.8	4.2
	최종소비지출 (%)	4.9	7.6	-0.3	0.4	3.4	4.2	3.7
	민간소비 (%)	4.9	7.9	-1.2	-0.3	3.2	4.1	3.5
	총고정자본형성 (%)	-0.2	6.6	4.0	2.1	2.3	2.9	2.5
	건설투자 (%)	6.0	5.3	7.9	1.1	0.4	0.5	1.5
	설비투자 (%)	-9.0	7.5	-1.2	3.8	5.1	7.5	4.5
대 외 거 래 통 관 기 준	경상수지 (억 \$)	80	54	119	282	166	30	-30
	무역수지 (억 \$)	93	103	150	294	232	170	100
	수출 (억 \$)	1,504	1,625	1,938	2,538	2,844	3,250	3,550
	증가율 (%)	(-12.7)	(8.0)	(19.3)	(31.0)	(12.0)	(14.3)	(9.2)
	수입 (억 \$)	1,411	1,521	1,788	2,245	2,612	3,080	3,450
	증가율 (%)	(-12.1)	(7.8)	(17.6)	(25.5)	(16.4)	(17.9)	(12.0)
기 타	소비자물가 (평균, %)	4.1	2.7	3.6	3.6	2.7	2.5	2.8
	실업률 (%)	3.8	3.1	3.4	3.7	3.7	3.5	3.7
금 융	원/\$ 환율 (평균, 원)	1,291	1,253	1,192	1,145	1,024	955	925
	국고채금리 (평균, %)	5.7	5.8	4.6	4.1	4.3	4.6	4.4